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정책자료 2020-10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김문길
김지원·최준영·이정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정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책자료 2020-10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55-9 93330

발|간|사

기초보장제도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과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올해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3년째 되는 해다. 모니터링의 주제는 기초보장제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해 새롭게 선정하여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효과,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의 효과와 향후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전문가 조사와 더불어 실시하였다. 통상 서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해오던 사업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 모임 금지 방침에 따라 전면 서면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 본 사업 운영으로 사회보장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사업은 김문길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지원 연구원과 최준영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포럼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제7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본 연구원의 소득보장정책연구실 박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힌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 5

제3절 기대 효과 ····· 7

제2장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효과 ····· 11

제1절 가장 큰 피해 집단 ····· 11

제2절 정부의 대책 ····· 15

제3절 지원방식 ····· 19

제4절 업무 영향 ····· 24

제3장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 31

제1절 가장 의미 있는 계획 ····· 31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 46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수급자, 전담 공무원 인력 ····· 40

제4절 자활사업 인프라 ····· 44

제5절 재산기준 개편 필요성과 방향 ····· 48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 ····· 53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포괄성 ····· 53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조건 ····· 58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범주 적절성 ····· 61

제4절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 전환 ····· 69

제5장 긴급재난지원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77

제1절 조사 개요 ····· 77

제2절 조사 결과 ····· 78

참고문헌 ····· 101

부록 ····· 103

표 목차

〈표 1-1〉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활동 기간 ····· 5
〈표 1-2〉 2020년 모니터링 포럼 활동 사항 ····· 7
〈표 5-1〉 2차 재난지원 유형별 적절성 인식 순위 ····· 83
〈표 5-2〉 주요 지원 대상 유형별 구체적 선정 기준 ····· 89
〈부표 1〉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책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05
〈부표 2〉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액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05
〈부표 3〉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1인 가구 ·· 106
〈부표 4〉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2인 가구 ·· 106
〈부표 5〉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3인 가구 ·· 107
〈부표 6〉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4인 가구 ·· 107
〈부표 7〉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5인 가구 ·· 108
〈부표 8〉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책이 적절하다는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08
〈부표 9〉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금액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09
〈부표 10〉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1인 가구 ····· 109
〈부표 11〉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2인 가구 ····· 110
〈부표 12〉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3인 가구 ····· 110
〈부표 13〉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4인 가구 ····· 111
〈부표 14〉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5인 가구 ····· 111
〈부표 15〉 [가. 대책평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대책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12

〈부표 16〉 [가. 대책평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12
〈부표 17〉 [가. 대책평가]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13
〈부표 18〉 [가. 대책평가] 아동돌봄 쿠폰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 113
〈부표 19〉 [가. 대책평가] 2차 재난지원 대책의 전체적인 적절성 ····· 114
〈부표 20〉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1순위 ····· 114
〈부표 21〉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2순위 ····· 115
〈부표 22〉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3순위 ····· 115
〈부표 23〉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4순위 ····· 116
〈부표 24〉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5순위 ····· 116
〈부표 25〉 [나. 향후대책]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 ····· 117
〈부표 26〉 [나. 향후대책] 가장 적절한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자 범위 ····· 118
〈부표 27〉 [나. 향후대책] 전국민 대상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의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해야 한다. ····· 118
〈부표 28〉 [나. 향후대책] 선별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 119
〈부표 29〉 [나. 향후대책] 선별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 119
〈부표 30〉 [나. 향후대책] 지급대상의 범위(10분위 기준) ····· 120
〈부표 31〉 [나. 향후대책] 현금과 소비쿠폰 중 효과적인 것 ····· 120
〈부표 32〉 [나. 향후대책] 중앙정부는 현금, 지방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 121
〈부표 33〉 [나. 향후대책]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의 지역제한 필요 정도 ··· 121
〈부표 34〉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1.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 122

〈부표 35〉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2. 백화점 ····· 122
〈부표 36〉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3. 온라인 전자상거래 ····· 123
〈부표 37〉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4. 대형전자 판매점 ····· 123
〈부표 38〉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5. 유흥주점,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 레저, 사행업종 ····· 124
〈부표 39〉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6.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 조세, 공공요금 업종 ····· 124
〈부표 40〉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7. 면세점 ····· 125
〈부표 41〉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8.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125
〈부표 42〉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9.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 126
〈부표 43〉 [나. 향후대책]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간 중복제한 없이 모두 수령 가능해야한다 ····· 126
〈부표 44〉 [전담공무원]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량 변화 ····· 127
〈부표 45〉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1순위 ····· 127
〈부표 46〉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2순위 ····· 128
〈부표 47〉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3순위 ····· 128
〈부표 48〉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4순위 ····· 129
〈부표 49〉 [전담공무원] 선별지원의 경우 행정비용 증가 우려에 대한 의견 ····· 129
〈부표 50〉 연령대 ····· 130
〈부표 51〉 이념성향 ····· 130

그림 목차

[그림 5-1]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 79
[그림 5-2] 2차-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 80
[그림 5-3] 2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 81
[그림 5-4] 2차-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82
[그림 5-5] 2차 재난지원 대책의 전체적인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 83
[그림 5-6] 2차 재난지원 대책 중 향후 강화해야 할 대책 1순위 ····· 84
[그림 5-7] 향후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 취약계층 생계지원 vs 경기부양 ····· 85
[그림 5-8]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자 범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 87
[그림 5-9] 지급대상 단위를 개인으로 해야 한다 ····· 90
[그림 5-10] 선별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 91
[그림 5-11] 향후 지급대상의 범위 ····· 93
[그림 5-12] 향후 지급시 효과적인 지급 수단: 현금 vs 소비쿠폰 ····· 94
[그림 5-13] 중앙정부는 현금, 지방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 95
[그림 5-14] 중앙과 지방의 지원 중복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야 ····· 96
[그림 5-15] 소비쿠폰 지급시 사용처 지역제한의 필요성 ····· 97
[그림 5-16] 소비쿠폰 지급시 사용처 업종별 제한에 대한 동의 정도 ····· 98
[그림 5-17]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변화와 가장 어려운 점 ····· 99
[그림 5-18] 지원 대상 선별 시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의견 ····· 100

제1장

서론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제3절 기대 효과

제 1 장 서론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더 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올해 사업에서 초점을 둔 주제는 세 가지로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세 가지 주제는 본 연구원에 있는 소득보장연구실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분야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긴급재난지원 효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선정하였음.

-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코로나19는 감염병 그 자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으로 인해 전국민에게 건강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의 지원방식과 규모 등에 관한 사회적인 논쟁이 격화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전달체계의 일선에서 취약계층을 직접 접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체감하는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 그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담공무원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두 번째 주제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21-'23년)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인식으로 설정하였음.
  - 동 계획에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를 목표로 4대 분야에 1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이 중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재산 기준의 합리적 개선,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검토 등의 대책을 주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음.
  - 취약계층을 일선에서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전담공무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예상보다 수급자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구성과 운영

○ 제7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포럼을 운영하여(김태완, 전지현, 2016, p. 4), 제1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9년에 제7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음(〈표 1-1〉 참조).
  - 전문위원 선정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 기관의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이며, 다양한 지역과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였음. 기존에 참여했던 위원 중 참여에 적극적인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외에 기존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음.
  - 7기 전문위원은 32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 갈 예정임.

〈표 1-1〉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활동 기간

기수	활동 기간
1기	2008~2009년
2기	2010~2011년
3기	2012~2013년
4기	2014년
5기	2015~2016년
6기	2017~2018년
7기	2019~2020년

□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성과 보고

○ 포럼 전문위원은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서면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포럼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함.

○ 서면과 포럼 참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정책자료 등으로 구성하여 포럼의 성과를 공유함.

○ 2020년 제7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은 아래 〈표 1-2〉에 제시함.

- 1차 서면의견 조사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등의 효과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음.
- 2차 서면의견 조사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음.
- 3차 서면의견 조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음.
- 그 밖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1~3차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집합, 나머지 전무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워크숍 진행

〈표 1-2〉 2020년 모니터링 포럼 활동 사항

날짜	활동 사항
2020. 12. 3.	제1차 서면의견 취합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
2020. 12. 7.	제2차 서면의견 취합 -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2020. 12. 9.	제3차 서면의견 취합 -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 12. 18.	2020년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온라인 워크숍 - 1~3차 주제
2020. 11. 30~(10일간)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전담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 온라인 조사

제3절 기대 효과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위원 중심의 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 조정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은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복지 대상자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영역이나 대상 집단에 대한 논의는 향후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갈 개선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기초보장제도의 장기수급자 특성에 대한 논의는 기초보장제도가 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빈곤 탈출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거 중심의 개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과 관련한 논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확대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 부정수급 관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제2장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효과

제1절 가장 큰 피해 집단
제2절 정부의 대책
제3절 지원방식
제4절 업무의 영향

제 2 장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지원 효과

□ 제2장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긴급재난 지원의 효과,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집단

○ 1차, 2차,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한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 보편지원 – 선별지원 중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이 업무에 미친 영향

제1절 가장 큰 피해 집단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주시

○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은 유흥음식점이라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크게 떨어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면 영업제한 및 출입자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함.
- 전년도 매출 기준 및 건강보험료로 긴급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융자에서 제외됨.
-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종사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퇴직할 때 실업급여 등의 정책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사무실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의 주제로도 자주 언급됨.

□ 경상북도 울진군

○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집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 번째, 생계와 연결된 집단 즉, 관광산업 및 유흥업 관련된 집단임.

- 관광업계는 당장 직격타를 받은 집단으로 실제 해외 여행업을 주로 하던 분들이 소득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국내 업계는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으로 쏠리게 되어 집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형만 조금 변경한다면 오히려 호황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유흥업의 경우 각종 유흥업에 대하여 금지 제재를 가하다 보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드러내지 않고 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집단은 흔히 결손집단이라고 부르는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결손집단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서비스가 그들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공 서비스가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을 중지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여 비 저소득집단과 경험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 세 번째 집단은 의료집단(방역 최일선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료집단은 생계문제와는 상관없지만 그것보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기간 지나친 희생을 기대하고 있어 그에 따르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종 감염방지장치를 한 채 업무를 수행하며 더불어 의료인으로써 감염의 우려로 개인 생활에도 지나친 자기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 집단 중 어느 집단이 더 피해가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그 피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써도 또한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피해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징 피해를 입은 집단은 단연 항공업계와 여행사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이 자영업자 식당 등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영화관과 학원등 전반적인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말할 것 도 없이 바이러스전파로 인해 여행관련 수요 축소와 단체 식당 등은 대면접촉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전파 우려로 인해서 영화관도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라서 아마 타격이 많았을 겁니다.

○ 그리고 관광버스 기차, 식당, 강습소 교사들, 노래교실등 사회의 전반적인 침체가 되었겠지요.

- 당연히 이유는 바이러스전파 우려로 인해 사람들끼리 대면이 많은 이유가 되겠지요.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 있은 집단은 노래방, PC방, 키즈카페 등 밀폐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종사자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들이 영업장 방문을 꺼려하며, 영업장에서 코로나19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로, 경제적인 타격을 제일 많이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개인 자영업자: 여행관련업계 종사자, 개인 프리랜서 종사자(돌봄, 각종 강사들)

- 국내외 여행의 제한으로 수요가 없고 특히, 국외여행이 막혀 여행관련 업계 종사자와 연관된 기타 관련자들이 파산 많았고 (예 지역에 있는 여행사 대표가 여행업을 계속할 수 없어 생계

유지 위해 업종변경 사례 있었음), 일대일 대면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종사자들이 비대면으로 피해가 큼.

제2절 정부의 대책

▣ 코로나19에 대응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시

○ 냉정한 시각이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비 대상자는 국가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경제, 사회경제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음.
- 그들에게 단순히 소득분위 등을 적용하여 재차 어려운 가정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많은 논란거리라 할 수 있음.

○ 본인 및 자녀들의 소득 감소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 생계비 대상자와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정책은 지양해야 함.

- 생계비 등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재원임. 정부는 재난 시에도 국가로부터 일정 소득을 취하는 저소득계층 보다는 세금의 재원인 비 저소득계층에 대해 지원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울진군

○ 코로나19 대응 중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많은 국민들에게 낯설게 다가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또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대다수 국민들 즉 현금성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낯선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현금성 지원인 1차 지원은 소고기 소비량이 늘었다는 기사처럼 평소에 못해 본 것을 해보는 것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2차 지원은 선별적 지원이여서 1차 때보다 체감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한 편으로는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즐거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듯 국민들이 느낀 정부의 대책은 소비를 진작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작은 이벤트 정도로 좋은 아이템이였다고 생각하며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 할 만큼 체감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정부 지원액이 꺼져가는 씨를 살릴만큼 개인에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일부 시장만 혜택을 보는 금액량이여서 (예를 들면 50만원을 받은 가정의 경우 소고기는 사먹을 수 있어 식당이나 육류, 채소, 음료, 유통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을 구입, 건축 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어려움) 한 두 번의 이벤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어

떤 가정에서는 연탄이 되고 기름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 여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 선물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 선심성으로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드는 예산을 모아서 지원한 것이라면 대 찬성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만드는데 쓰는 것은 고려해 봐야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거라서 단시일 내에 지급을 하고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하위 75%미만가구를 선별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을 필요로 했으며 선별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또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보니 발행된 상품권이 부족하여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카드사나 행정센터를 직접방문지급을 하게 되어서 빠르게 쉽게 지급되었으며 별과정의 행정력도 큰 소모를 하지 아주신속하게 별 탈 없이 지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 대도시와 농어촌등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제도가 좋은 제도 이긴 하나 예산대비 지원을 하다 보니 금융소득등에서 지원 제외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아닌 3개월

을 주게되고 심지어 6개월까지 준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코로나는 재난이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금은 효과적이었음.

○ 2차재난지원금은 선별으로 지원하는데 선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소득비교-작년과 올해의 소득 비교 등, 증빙하는 서류가 객관적이지 않음) 상담 및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도 긴급한 사람이 아닌, 대상자의 조건을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조건의 달리하며 2년 연속 받거나 최장 6개월까지 받음 – 정보공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계속 받는지 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충청남도 서천군(1)

○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으로 적정하다 생각하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높아 신청자 많지 않았고, 조사에 따른 민원발생 등 적절하지 못했음.

-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준 완화하면서 대상자 발굴 및 신청으로 지원대상 가구는 증가하였으나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현상 있음(20년도).

제3절 지원방식

▣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정도에 따른 선별지원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시

○ 효과적인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임.

- 현재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으로는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없음. 각 사업장이 매출에 대해 객관적으로 매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출 및 소득을 선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현재, 선별지원금은 정부가 예측한 대상자중 50%이상을 지원하기 힘든 상태임. 그럼에도 국민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선별지원을 통해 세출을 절감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정부의 정책은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임.
- 보편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올릴 수 있음. 국가가 어려울 때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극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음. 정부는 지원금을 가급적 소상공인들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요구한다면 국민 또한 국가를 위한 작은 실천을 펼칠 수 있음으로써 재난극복이라는 사회운동을 일으킬 수 있음.

○ 3차 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원을 해야 함.

- 보편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현금지원 보다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작금의 현상은 미래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수년 또는 매년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소득신고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
- 재난이 벌어질 때 마다 특정 피해사업에 대해 국민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국세청은 매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재난시 필요한 곳으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음.

□ 경상북도 울진군

○ 1차 지원 또는 2차 지원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요 되야 할 많은 행정력을 아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하며 시장에서 화두가 되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라도 지원금을 받고 써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늘 경계에 머무르며 적당한 소득과 적당한 재산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아 본적이 없는 중산층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받는데 익숙한 면이 있어 받을 당시는 좋지만 더욱 복지병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으며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해수욕장에 모래 한포대 섞는 의미 이상이 아니므로 애매한 중간계층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차 지원과 2차 지원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 국민 대상 지원이 1차지원이였다는 점은 최초지원이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정서적인 지지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소득보충의 측면과 상관없이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일원이라는 의미로 타당한 일이였다고 봅니다.

○ 2차 지원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상자를 봤을 때 피해를 입은 집단이 대부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때는 1차지원은 정신적인 효과가, 2차지원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전체 경제흐름으로 봤을 때는 1차와 2차 지원금이 금액단위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으므로 시장에 풀리는 정도는 금액의 규모에 따른 변수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차 정부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었다면 2차 지원금은 일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지원금은 더욱 공감가는 지원이 되도록 1,2차 지원때보다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2차 지원 대상이 영업제한 업종, 실업자, 긴급생계 곤란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이었는데 3차 지원은 더욱 세분화하여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규모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여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액을 키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100~20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되도록 규모를 키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또한 아동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유아 및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무리수를 두고 과감한 생각을 해보자면 일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 성과위주의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정부에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킨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성과측정 방법에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영업제한 준수,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라도 철저히 했던 업체에 지원하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급이 더욱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선별지원은 선별하기 위해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기관에서 선별하는데 상당한 행정력이 소비되며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의 괴리가 있어서 다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받고 누

구는 안받고 하는 불평등과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선별되지 못한 국민들은 같은 세금내고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도움을 못 받고 하는 많은 불만들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 3차 지원 방식

- 서울등 대도시의 자영업자등은 점포세, 인건비등 어려움이 중소도시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등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국가 채권등을 발행해서까지 넘 남발하는 국가 재정지출이 될까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만약 3차 지원이 선별지원이 되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지원 대상자 분들이 3차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지원 때와 같이 신속하게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현금지원이 최고겠지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코로나19는 재난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2차 때처럼 선별적 지원을 한다면 모호한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3차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직원들은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들의 소득 조사를 통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 재산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했다고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적

-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정도를 선별하는 시간과 인력투입 신청자들의 민원야기 있고, 재난지원금을 받음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 재난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별보다는 전국민대상 지원이 좋다고 생각함.

○ 3차 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지원해야한다면, 선별 보다는 전국민 지원, 현금지원보다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함.
- 단, 코로나로 영업제한을 받는(예. 21시 이후 영업불가 업종 등) 영세업자에게 직접 현금지원보다 간접지원(각종 세액 감면:전기,전화,공공보험,국세,지방세 등) 검토 건의

제4절 업무 영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들이 귀하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변화된 업무에서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 제주시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들은 국민과 저소득층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 저소득계층은 현재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비 저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은 국가지원을 받는 저소득계층의 배제를 통해 소득 역전 현상을 막으려고 함. 이러한 사회현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음.
- 소득의 감소는 곧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후원의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시킴. 후원이 축소되는 경우 후원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류는 후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재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함. 이는 행정에 대한 압박을 일으키며 지방의 경우 도 및 시의원들을 통해 무절제 및 무계획성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짐.
- 복지를 시행하는 공무원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음.

□ 경상북도 울진군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누가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인가입니다. 어느 시군구든 마찬가지일 듯 한데 지원분야가 특정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맡게 되지만 보편적인 현금지원의 경우 정부지원, 시도지원, 시군구지원이 모두 기준이 달라 복지파트에서 모두 수행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인력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지원이 있을 때 마다 TF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차출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시군에서는 코로나 직접 대응(역학조사, 동선공개, 각종 관련

민원처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과 영업제한 업소 관리, 종교시설 관리 등등 기존 업무 범위에서 가중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지원금 업무까지 가중되어 모든 정책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기존업무와 더불어 보이지 않게 대부분의 부서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지원과 광역, 기초 지자체 3군데에서 각각 지원방안을 생각하여 결국은 기초시군구 직원들이 그 모든 것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기존 보던 업무에다다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지급과 생활치료센터 관리등 부과되는 업무가 아주 많아 졌네요.

- 재난지원금 선별작업 하느라고 거의 두 달 정도를 선별지급관련 일에 매달렸던 것 같고 현재는 위기가구 선별 및 지급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당연히 국가의 준전시상황이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라의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당연 어려움 점은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생활치료센터지원 위기기구 선별지급 등 기존업무에다 추가로 업무를 보고 있으나 국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려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코로나19로 방역, 재난지원 지원 등 업무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보여주기 식으로) 비합리적인 업무지시, 중복 업무 지시 등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소득 가구 한시적 지원금, 영유아 자녀 긴급지원금, 저소득 어르신 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저소득 가구 먼저 지급 등

□ 충청남도 서천군(1)

○ 위기상황에 따른 현물기부가 증가하여 이웃돕기 나눔업무 폭발적 증가(마스크, 소독제, 위생용품, 기타 등등)

- 긴급복지 대상자 증가로 지원업무 증가
- 코로나19 입원, 생활격리자 관리 업무 증가

□ 충청남도 서천군(2)

제3장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제1절 가장 의미 있는 계획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수급자, 전담 공무원 인력
제4절 자활사업 인프라
제5절 재산기준 개편 필요성과 방향

제3장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에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동 계획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 2가지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영향(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수급자) 증가 규모 예상과 전담 공무원 인력 증원 필요성

○ 재산기준 개편에 관한 의견

제1절 가장 의미 있는 계획

▣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 2가지를 꼽으신다면 무엇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추진배경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00년 도입 이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종합계획이다.

- 대한민국은 이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각 종 소득분위 50%이하는 당연히 복지와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이상도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 복지급여의 중심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과연 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 20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폐지 및 보편적 복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시스템 강화, 확인조사 확대, 신고 활성화, 현정점검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초보장제도가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력지원 내지 별도 법인(사회보장정보원과 유사한 조사전담 법인, 단체 등) 또는 위탁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자 결정, 법인 또는 수탁기관은 부정수급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초보장과에서 신규책정과 조사업무를 함께 한다면 부정수급자 방지 또는 개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인천희망자활센터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폐지

- 이유는 직계가족의 소득으로 인한 수급자격 박탈 허나 현실은

허울뿐인 직계가족들의 단절로 수급의 조건에서 탈락되며 그로인해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함.

□ 경상북도 울진군

○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입니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차상위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경우 부양의무자 1인 가구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달리 보건복지부 주관의 정기 확인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못보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아왔습니다 호적에는 자녀로 있으나 당사자와의 가족단절 등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기타 생활보장 심의회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에는 양면의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문제등 실절적인 많은 보완과 대책 후

에 단계적 폐지기 필요하리라 봅니다.

○ 청년층 탈빈곤강화

- 현재 코로나 등 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창 일 할 고급인력인 청년들이 놀고 있으면 국가적인 손해가 아닐 수 없기에 청년들의 탈빈곤화는 장래의 국가 정책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므로 취업등과 연계하여 강화되어야 정책 중에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기초수급 신청, 조사, 관리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증가로 대상자의 급여 감소 혹은 중지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가족간에도 부양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1촌에게 부양의무는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기준폐지를 통해 대상자의 조사, 관리의 편리성과 현시대의 부양의무(국가, 본인)의 변화를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 강화

- 대상자들의 경계선적인 소득, 다양한 상황(화재, 재난, 소득 상실, 질병)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강화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강화

- 복지지원제도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의 생계곤란을 고려할 때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 사람중심 자활 지원체계 수립

- 기초생활제도가 머무르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최저생계를 넘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해체되진 않았지만,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미약 또는 있음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 많음,
- 현재는 주거급여와 일부 가구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폐지되면 수급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임.

○ 청년주거급여 지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수급자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
- 거주여건만 안정되어도 경제적 어려움 완화됨.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측면

▣ 세부 추진 과제 중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예견되는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부양의무자 폐지는 모든 계층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 긍정적 측면

- 첫째, 고령화 및 장애인 가구의 안정은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젊은 계층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둘째, 다양한 공적이전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셋째, 고령층 및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경제활동력이 강한 부양자 등에 증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보유만 하는 부동자산을 이용자산으로 전환 및 경제활성화로 세수를 증액 시킬 수 있다.

○ 부정적 측면

- 가족간의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인하여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높아진다. 특히,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사

회전반적 퍼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지 주장, 부양기피의 정당화 등 지금까지 이어온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인천희망자활센터

○ 긍정적 측면

- 사회적약자인 사람들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다양한 복지혜택

○ 부정적 측면

- 국기법을 악용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계가족등 정말 받지 말아야 할 곳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음.
- 복지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지 저하등,
- 수급자의 기준에 맞춤현상으로 가난의 대물림현상
- 전국민 자활근로 참여확대

□ 경상북도 울진군

○ 긍정적 측면

- 일선에서 경험해 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와 실제 부양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정적 측면

- 재산 증여, 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과정에서의 민원 마찰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 부정수급자 조사에 대한 지자체 단위는 전문성과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조사단을 운영하여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문조사를 대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산재해 있는 자산조사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긍정적 측면

- 현장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정부의 혜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단절로 인해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는데요. 이런 분들에겐 부양의무자 부양폐지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법의테로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부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 부정적 측면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되는대로 국가의 부양능력폐지로 인해 부양을 기피하거나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세금부담이 한층 가중되겠고 완전한 국가의 복지국가로 가야하므로 엄청난 국가재정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들의 재정 부담이 국가로 전가되기에 국가는 복지재정지출이 많아지겠지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긍정적 측면

-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녀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신청, 조사, 관리 측면이 단조로워 져서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측면

- 부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정한 연령이 도래된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 등을 옮긴 후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청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다 사용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 긍정적 측면

- 실제적인 지원을 못 받는 가족으로 인한 생계, 의료 탈락 방지
- 가족관계 단절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성을 설명해야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감소
- 가족관계 단절에 대해 공개해야하는 당사자의 자존감 하락 방지

○ 부정적 측면

- 1차 안정망인 가족관계의 책무성 약화

□ 충청남도 서천군(1)

○ 긍정적 측면

- 조사업무 간소화, 민원발생 현저히 줄어듦
-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를 둔 대상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 부정적 측면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책정제외되었거나, 미신청자들이 신청 폭주로 인력난 예상됨
- 제도를 악용하여 제도권 안에 진입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남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수급자, 전담 공무원 인력

▣ 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구, '22년 그 외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수급자)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전담 공무원 인력이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급자 증가

- 우리나라는 이미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부정수급자인 경우에도 처벌이 미비고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우선은 수혜대상자가 되보자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에 대해 전국민에게 알려질 경우 대거 소유 재산에 대해 증여 및 처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중 재산초과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급자가 되기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 사료된다. 2020년 현재 다른 재산·소득 없고 5.7억 대도시 주택만 소유땐 기초연금 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기초연금 대상자는 수급자 범위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전담 공무원 인력이 충분히 대응가능 여부

- 현재 전담 공무원 인력으로 늘어나는 수급자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없다. 또한 한부서의 공무원이 수급자로 선정하고 다시 부정수급자를 찾는다는 것 또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동료를 생각하는 도의적 책임으로 부정수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를 별도로 만들거나 별도 법인 또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 인천희망자활센터

○ 생계급여 수급가구(수급자)의 증가는 30%정도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수 비례로 생각함.)

○ 공무원인력은 3~4년전부터 공무원의 인력충원이 많이 됐다고 생각됐음. 허나 수급가구의 증가수에 따라 인력충원도 고려해야 할 듯함.

□ 경상북도 울진군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의 차상위계층 현황으로 판단할 때 전국적으로 20~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 현재 전담 공무원 인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수급자수 증가율을 반영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이 이루어 않고 수급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투입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낮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대략 저희 시의 경우는 7만5천 가구에서 노인가구가 한부모 가구가 2만가구 내외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앞으로 7천에서 1만5찬가구정도가 늘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 65세 노인가구는 고령화로 인해 점점 늘어가고 이혼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대비 10%~ 15%내외로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이에 기존 복지공무원 인력도 현재대비 10%~20%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에 늘어나는 만큼 전담공무원수도 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차상위, 기초수급 등에서 30% 이상 증가 할 거라 생각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재산에 대한 반영비율(혜택 없앰)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조사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 및 재조사” 하는 부분으로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관리팀도 대상자의 증가로 업무의 양이 증가됨으로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증가량 예상 불가, 관련 데이터 없음.

○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함.

□ 충청남도 서천군(1)

○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수급자는 크게 증가될 것 같지 않음.

- 이미 기초연금으로 소득재산 파악된 노인들은 전체 데이터 추출로 얼마든지 수급자 증가량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며,
- 한부모가구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제도 변경이 되면 밀려드는 민원과 신청 조사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담공무원 충원 필요

제4절 자활사업 인프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유입되는 자활참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약 25천명) 되는데 현재 자활 인프라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현재 자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사업기관을 위탁한 곳은 자활사업 출발부터 지금껏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수탁경영으로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모습이 강하다. 자활사업의 취지 보다는 현재 위수탁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더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자활사업자가 늘어난다면 사업확장 보다는 기구확장을 요구하여 조건부 수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

- 또한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 겹치는 실정으로 매출이 새로 발생하기 보다는 서로의 매출을 깎아내는 결과가 발생하여 현재 펼치는 사업을 확장하기에도 힘든 실정이다.

○ 인프라는 일부 준비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자활사업 대상자를 수용하기는 역부족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계에 부딪친 실정으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지도라고 생각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노동부에서 펼치는 청소년고용뉴딜 사업처럼 민간 사업장에 자활참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 배치가 안되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계비 감액 조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생활자체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무노동 무임금의 사회적 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인천희망자활센터

○ 자활참여자의 증가만큼 자활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음. 감당이 안될 정도로 물밀듯이 현재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장에선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없으며, 참여자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즉 정신장애(조현병,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등 등)나 알콜릭 등 근로가 안되는 상황인 참여자들도 모두 지역자활센터로 보내고 있는 상황임, 어느 순간 지역자활센터가 최전방이 되어 응대하고 심지어 리턴의 권한도 없어 참여시키고 있음.

○ 제소견으로는 문제가 있는 참여자들은 현재 각 지자체에 알콜센터나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지역자활센터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복역이후 지역자활센터로 참여자가 오고 있음,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봄. 근로를 하는 곳이라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그분들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경상북도 울진군

○ 현재 자활 인프라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활참여자 증가를 충분히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20% 정도의 자활참여자 증가를 예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 초기('21~'22년)에 참여자 증가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활 인프라 투자 수요를 전국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업무과중이 예상되는 근로능력 평가,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사업단 운영 등의 인력충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자활인프라 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 지역 자활센터의 경우 285명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의 두 배 정도인 5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확대와 직원들 그리고 예산이 관건이겠지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자활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도 대기를 하는 상황임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직업훈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알콜, 정신질환, 근로 기피자)의 증가로 자활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운영기준과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자활인프라는 오랜 기간 발전이 없다고 봄.

- 시장과 경쟁해야하는 자활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됨.
- 자활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전체 이관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확보해야함.
- 고용노동부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을 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중복하여 실시하려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됨. 경쟁도 안 된다고 생각함.

□ 충청남도 서천군(1)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탈락되는 수급자는, 거의 노령층이기 때문에 자활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음(대도시, 농어촌 격차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자활참여자 증가한다면 현재 자활 인프라로 감당 불가하다 생각함

- 당연히 자활인프라를 확충해야하며 직업상담사(또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를 확보하여 자활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계가 필요. 또 직업자원 확보하고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에 준하는 직업연계가 필요함.

제5절 재산기준 개편 필요성과 방향

▣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향후 재산기준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소득인정액 제도와 대안으로 컷오프(cut-off) 제도가 제시될 가능성이 큰데,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하신 제도의 개선점 혹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정권과 정치권은 국민에 대해 수혜를 주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지만 그 수혜에 대해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피하고 있다. 매년 물가 인상율은 높아져 감으로 재산기준은 상향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컷 오프제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현재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보았을 때 그나마 소득인정액 제도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파악이 힘들 때 유용한 제도이다.

○ 현재 행복e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국세청은 매월 매출 및 소득발생자료를 신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두 시스템을 연동하고 매월 전국민의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면 소득인정액 제도보다는 컷오프 제도가 훨씬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경상북도 울진군

○ 사각지대에 대한 수용 범위가 넓은 현행 소득인정액 제도가 바람직하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인상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치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반가구의 기본재산액과 재산범위 특례가구의 재산기준 모두 현실을 반영하여 충분히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저는 현재의 소득인정액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 부동산과 금융소득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소득의 인정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현재의소득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생계급여에만 컷오프제도가 시행되면 책정과 국민들에게도 혼란이 당분간 있지 않을까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컷오프 방식은 간편한 방법이지만 대상자의 상황(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완화되거나 기본 감액처리해준 상황을 줄어야하며, 부정수급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형벌 등 강력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선정기준이 유동적이면 제도에 신뢰성이 떨어짐.

- 컷오프제도 운영하는 거에 따른 실익이 적다고 봄.

□ 충청남도 서천군(1)

○ 재산 종류 및 적정한 기준을 두고 컷오프 제도를 실시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세분화하는 것보다 기준에 맞으면 복지혜택을 주도록 한다면 수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일 수 있고 수급자 조사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임.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포괄성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조건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범주 적절성
제4절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 전환

제 4 장 긴급복지지원제도

□ 제4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대적용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지난 3월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관련 예산과 결정과정 확대 조치가 있었음에도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선결 조건

○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규정하는 위기사유 범주의 적절성, 재량 적용 경험

○ 위기 상황 여부를 공무원 재량으로 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포괄성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과 결정 과정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3월). 하지만 실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왜 위기 국민들을 잘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 우리나라 각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특례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 대상자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타법에서 걸러지지 않은 대상자를 찾기 힘든 상태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규정을 만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도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바라는 소득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수혜를 받더라도 국민은 생활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급여수준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에게 마치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홍보와 국민의 체감이 맞지 않을 때 국민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계성과 국민이 요구하는 수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지원의 한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코로나19에 따라 실직, 폐업 등 위기가구 지원하는 사업 증가함.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해당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로 연계되는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폐업 등 위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위소득75%이하의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실제 실직이라도 지원받지 못함

○ 언론에 홍보되는 실직사유와 긴급지원의 위기사유 각 항목별 세부기준이 너무 엄격함

- 실직 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움

□ 강원도 홍천군

○ 코로나 19관련 실업급여, 소상공인 지원, 청년지원 등 많은 지원 시책으로 증가로 인한 중복지원 제외 사유와 코로나 19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현 완화된 기준에 적합 어려움(소득은 감소에 따른 한시적 어려움으로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이 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못함).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 25%이상 감소 증빙이 어려운 직종이 많음.

□ 경상남도 의령군

○ 재산기준

-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특히 금융재산 기준이 보험금 합계로 되어 있어 대부분 문의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대부분 보험 몇 개정도 들어 있음)

□ 경상북도 안동시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제한된 지원사업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보통 지원을 받으려고 상담을 하다보면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면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가 금액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보통직장인의 한두달 월급정도도 제한을 하니 말 그대로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방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휴폐업 등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며 긴급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긴급지원(30만 원)과 맞춤형지원(50만 원 내외 생필품, 전기료 등 2회 지원가능) 또는 민간자원 연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이온스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국민들을 잘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도에 맞게 긴급하게 경제적 혹은 의료비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은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늘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다른 사람은 지원을 받는데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제도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늘 있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 긴급복지제도는 위기개입 지원입니다. 위기개입을 위한 제도로서 긴급복지제도는 그 역할을 의미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 과도한 사교육, 미친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많이 회자되는 어려움이지만, 복지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과도하게 낮은 최저임금과 주거비, 의료비 등입니다.
- 주거비, 의료비 등은 정부지원으로 어느 정도 개입 가능하고 원천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각종 공제항목 및 생활준비금 등 차감항목이 있으나 금융재산기준(5백만 원)으로 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적임.

-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아닌 중위층 이상으로 상대적 상실감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고 봄.

○ 지침상 위기사유가 제한적이며(실직 등 증빙서류 구비가 쉽지 않음) 지자체 조례나 (동절기)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기사유로 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담당직원의 역량 및 제도 이해도에 따른 자의적 해석 등 문제 유발 가능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효과성 제고 조건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기 사유 범위 확대, 일선 공무원 인력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 등 조건 완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

- 자치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지원범위 및 대상자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통해 각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폐합하여 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듯이 중앙부처에서 일편으로 편성하는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긴급지원 위기사유 전담 상담사(콜센터) 운영 필요

- 보건복지129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별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구청 담당에게 연계하는 수준이며, 각

구청의 긴급복지 담당은 1~3명에 불과해 기 신청된 접수건에 대한 검토 및 급여지원 등 업무폭주 상태임.

○ 코로나19 등에 따라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긴급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확대 필요

□ 강원도 홍천군

○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

- 코로나 한시지원 확대 관련 보조인력이 배치되었지만, 상담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음.

○ 질의응답집 최신판 개정 시달 필요

- 긴급지원의 업무특성상 담당자의 판단이 큰 사업임. 사업의 가이드가 되어줄 지침의 재점검 및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질의응답집 최신판 마련 필요

○ 부채공제방식 변경(일반재산 공제에서 금융재산공제)

- 신청시 금융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소득이 감소하고 어려울수록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 간병비 등의 확보를 위해 금융재산을 비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경상남도 의령군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충, 부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한 가구가 수치심으로 신청못하는 경우에 대한 홍보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상북도 안동시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소득을 제한 한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 금융소득이 통장잔고 500만 원이하로 정해놓으니 생활준비금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니까 평소의 생활자금으로 준비해 둔 돈이 긴급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 금융재산은 좀더 높이면 더 원활한 긴급지원제도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너무 그러면 또 긴급지원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효과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시 혹은 복지사각지대 가정방문시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조건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많습니다. 사업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기사유 범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장기연체를 유발하는 기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보료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지원은 1회로 한정해합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위기사유 범위의 확대

○ 시스템 정비(일반 복지대상자 관리 조사표와 긴급지원대상자 관리 조사표 개선 속도의 차이가 큼.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움)

○ 금융재산 기준 완화

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범주 적절성

▣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함께 위기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아래 점선 박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시기에 아래의 위기사유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긴급복지를 지원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출, 행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기 힘들다. 구금시설 수용부문은 사회적 정서상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충

분히 지원가능하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또한 질명 또는 부상을 당해도 급여가 나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형평성을 가름하기 쉽지 않다.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아동인 경우는 아동복지법,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등으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발생시 대부분 아동, 여성 쉼터를 이용하며 이 경우 관련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인재 또는 재난이 발생시 재난구호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휴업, 폐업, 화재가 발생해도 각종 보험의 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지원, 지역경제과의 금융지원 등이 있으며 특히 전년도 매출이 소득이 기준으로 된 현 시스템으로는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이 자의적인지 사업장의 사정인지 정확히 확인 할 수 없다.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의 경우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공무원 중 누구도 자의적 해석과 적극적 행정을 하고자 하나 사업추진 후 개인적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므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지원사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 제주도인 경우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계획이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지원대상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중위소득 80%이하	1,405,755	2,393,584	3,096,461	3,799,339	4,502,216	5,205,094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행정시에서는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 때 반드시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
- 특히, 제외 또는 중지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특별생계비 지원대상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비고
지원액	165,290	281,440	364,090	446,730	529,380	612,030	'19년 동일

○ 지원방법 : 개인별(세대주) 통장 입금 원칙

○ 지원절차

• 1 순위 대상

현장 및 확인 조사(시) ⇒ 심의 (전문 위원회) ⇒ 지원결정 (시) ⇒ - 결정 통보 (시→읍면동→대상자) - 지원(시) (시→대상자)

• 2 순위

민원인 또는 직원조사 (읍·면·동) ⇒ 현장확인 및 조사 (읍·면·동, 시) ⇒ 신청 - 관계서류 첨부 (읍·면·동) ⇒ - 지원 결정 통보 (시→읍면동→대상자) - 지원 (시→대상자)

□ **2020년 예산액 :** 646,499천원(제주시 367,237, 서귀포시 279,262)

□ **행정사항**

○ 지원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추가 지원

○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 계속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위기사유 범위는 적절하다고 보나 각 위기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음.

- 예를 들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의 경우 검찰청 등에서 범죄피해자구제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출소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출소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긴급복지가 최후의 지원이 되도록 우선 위기대상자 관련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 강원도 홍천군

○ 적정하다고 판단 됨.

- 8항 수도, 가스 3개월 이상 체납조항 관련하여 수도, 가스 3개

월 이상 체납시 대상자가 3개월차에 수도, 가스 사용을 위하여 대출이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사례 다수 발생.

□ 경상남도 의령군

○ 위기에 처한 가구의 9개 항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위기에 처한 가구의 주위 자원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안내 교육 필요
- 통·이장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어 관심만 있다면 지역자원 특히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회원 등 관심 필요

□ 경상북도 안동시

○ 주로 긴급지원 상담을 하다보면 위의 상항에 해당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의 지급위기 사유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긴급지원 상항을 위의 해당 사항으로 지급을 하고 만약 이 사항에 해당이 안 될 경우는 지자체 자체 긴급복지지원이나 민간자원연결(라이온스 등) 또는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연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맞춤형 사례관리팀이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50만원내외로 생필품이나 전기료 의료비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시의 경우를 보면 맞춤형복지지원과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업무를 보니 많은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원할 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위기 사유의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주택 등)은 있지만 갑작스런 질병으로 경제소득이 상실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긴급복지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재산을 처분할 시간보다 당장의 생활고를 겪고 계신 분이 있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위기 사유에 대한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비해당 사유에 대해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위기사유를 확대·세분화 할 필요성 있음

제4절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 전환

▣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설정하고 우선 신청을 받은 후 위기 상황여부를 공무원의 판단하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는 positive list라고 하여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negative list로 전환하여 신청하면 우선 지원해 주고 사후적으로 위기여부를 판정하는 체계(현재 위기사유는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 공무원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사업추진 후 감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권한을 갖음으로써 긴급복지를 최소화 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실과장 또는 읍면동장의 책정하라는 지시에 대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 일정정도의 기준을 담당자가 지정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써 업무 기피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 짧은 기간 안에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민원인이 혼동하는 사례를 통한 고질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지침에 대해 결정권을 갖게 됨으로써 타 법정업무를 하는데 불만요인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아질 것이다.

○ 공무원 판단에 의해 지원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판단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전횡을 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재의 positive list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사후적으로 위기사유를 판정한다면 만성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를 것이며 공무원 판단으로 위기상황을 결정한다면 객관적인 지원이 안 됨.
- 현재도 국가 긴급지원 대상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으로 서울형 긴급지원, 이웃돕기 성금활용을 한 위기가구 지원 등 위기사례에 자원은 매우 다양함.

□ 강원도 홍천군

○ 긴급지원사업 악용 및 민원 폭주 우려

-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설정하고 상황여부를 담당공무원의 판단하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폭주할 것임.
-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아

닌 별도의 한시적인 새로운 지원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 현행대로 유지는 것이 필요함.

□ 경상남도 의령군

○ negative list 전환신청에 동의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지에 맞게 선지원 후조사를 하여 긴급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에 먼저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청시 시원 후 기준초과분은 환수한다는 동의서를 구하면 가능함.
- 담당공무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환수받기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일을 못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 등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담당공무원의 면책 필요

□ 경상북도 안동시

○ 보통 상담이나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위기에 처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은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애기를 듣고 하면 이분이 현재 상항과 긴급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지요. 말 그대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하면 악용 될 소지도 있고 해서 방문상담 등을 하여 최소한의 짧은 시간으로 긴급하게 상항이 판단되면 선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월세,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등 체납도 간단히 확인하여 어느 정도 참고하여 판단되면 방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위

기상항에 놓여 나를 판단하여 재산 등을 후조사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빨리 지원함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후적 위기여부를 판정한다면 긴급지원 건수는 증가하겠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받기가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매년 찾아와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현재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곳은 되는데, 너희는 왜? 해주지 않느냐?!."는 등 민원제기가 많아질거라 예상됩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지침이 표현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 뿐 아니라 제도의 건전성을 위해 positive list로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 negative list로 전환하여 선지원 한 후 미지원대상자로 판정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박한 대상자로 하여금 거짓신청을 유발하리라 예상됩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1)

○ 위기사유를 선정하는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화 및 스트레스 예상됨.

○ 또한 위기사유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타자원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 현재 순서가 합당하다고 봄

○ 위기사유 확대 및 사례를 정비하여 지침에 넣어 담당직원들이 위기사유를 바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제5장

긴급재난지원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 5 장 긴급재난지원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이하 내용은 긴급재난지원 효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여유진 외(2021)[1]의 제4장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미리 밝힘.

제1절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사회복지/경제 계열 전문가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표본수	○ 81명 - 전문가 56명 (사회복지계열 전문가 27명, 경제계열 29명) - 전담 공무원 25명
조사방법	- 웹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및 설문지 파일 발송)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 2021년 1월 12일(화) (12일간, 주말제외)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1) 여유진 외.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절 조사 결과

1. 기존 대책 평가

□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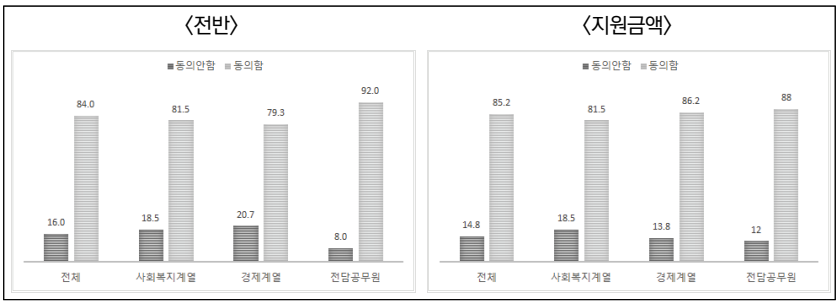
○ 좌측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었다.' 우측의 그림은 '지원액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다'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으로 설문한 것을 동의하지 않음-동의함의 2개 응답으로 정리하였다. 이하 마찬가지다).

○ 1차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적절하다는데 동의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84.0%로 나타남.

- 조사대상 집단 중 전담공무원이 92.0%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계열별 전문가는 79.3%(경제)에서 81.5%(사회복지)의 수준임.
- 지원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5%가 적절하다는데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전담공무원, 경제계열, 사회복지계열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적절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인 반면, 지원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의 정도를 가짐.

〔그림 5-1〕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여부

○ 1차 지원이 소득, 재산, 종사상 지위, 피해정도 등에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차 지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교, 휴원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돌봄쿠폰'의 5가지 지원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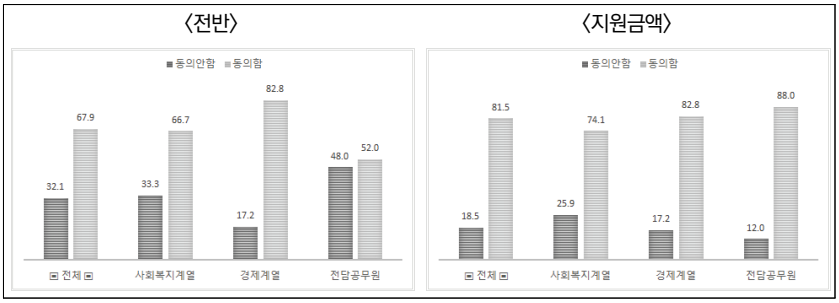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전반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9%가 동의하여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낮은 동의 정도를 보임.

- 경제계열 전문가의 82.8%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전담공무원은 52.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대비를 보임. 사회복지계열 전문가는 그 중간 정도의 동의 비율을 보임.

- 지원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81.5%가 동의
  - 계열별로는 전담공무원, 경제계열 전문가,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순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 2차-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5.3%가 적절한 대책이었다는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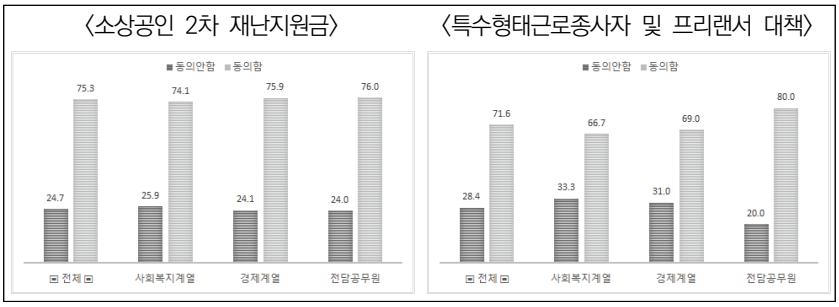
- 계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자 보다는 약간 낮은 71.6%가 동의

- 전담공무원, 경제계열 전문가,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3〕 2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2차 지원내용 중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6.8%가 적절한 대책이라는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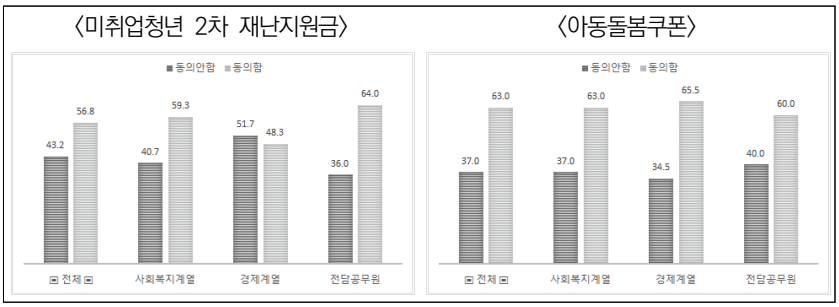
- 계열별 동의 비율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계열 전문가, 경제계열 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돌봄쿠폰'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3.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5-4〕 2차-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5가지 2차 재난지원 중 가장 적절한 지원

○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75.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71.6%),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67.9%), ‘아동돌봄쿠폰’(63.0%),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56.8%) 순

- 계열별로는 사회복지계열 전문가가 위기가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상 지원에 동일한 동의 정도를 보인 것 외에는 전체 응답자와 같은 분포
-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위기가구,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아동돌봄, 미취업 청년의 순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아동돌봄, 위기가구의 순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표 5-1〉 2차 재난지원 유형별 적절성 인식 순위

구분	전체	사회복지계열	경제계열	전담공무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	2	1	5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1	1	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2	2	3	1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5	5	5	3
아동돌봄쿠폰	4	4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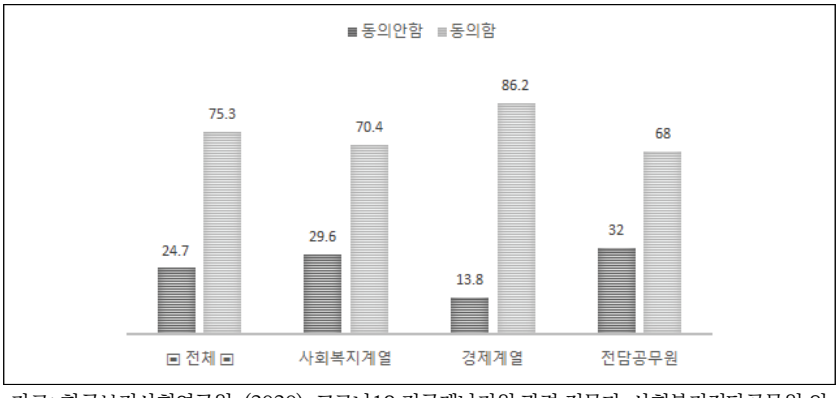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2차 재난지원 대책의 전체적인 적절성에 대한 동의 정도

○ 전체적으로 75.3%가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계열별로는 경제계열 전문가의 86.2%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계열 전문가(79.4%), 전담공무원(68.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 2차 재난지원 대책의 전체적인 적절성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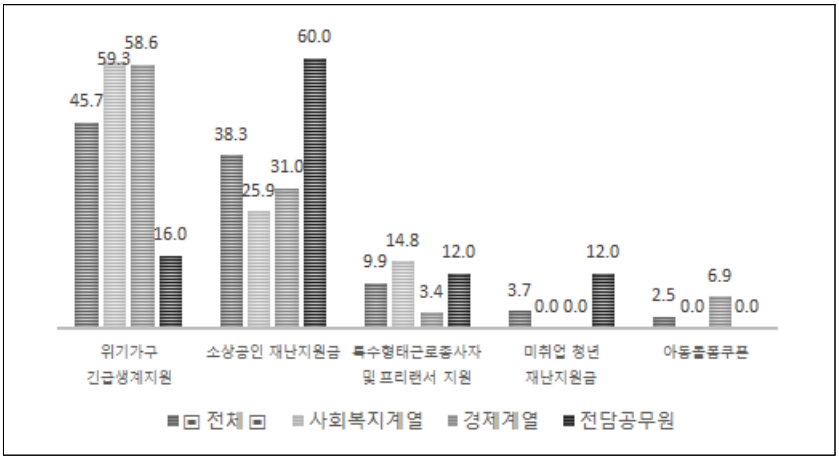
□ 2차 재난지원 대책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대책의 우선순위

○ 1순위로 꼽힌 대책은 전체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와 경제계열 전문가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1순위로 꼽음.
- 전문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전담공무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각각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5-6] 2차 재난지원 대책 중 향후 강화해야 할 대책 1순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2. 향후 대책

□ 향후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을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부양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와 전담공무원의 의견을 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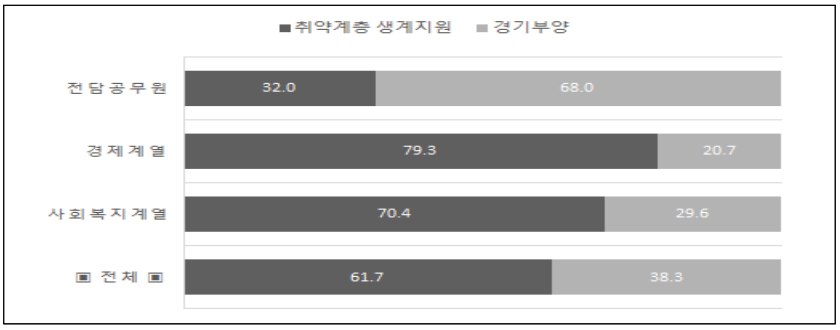
○ 이 같은 질문의 취지는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임. 예컨대, 경기부양에 더 큰 목적을 가질 경우 지원 대상을 넓게 잡을 필요가 있고(선별보다 보편), 소비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수단(현금보다 소비쿠폰)이 동원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는 61.7%가 취약계층 지원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계열별로는 경제계열 전문가(79.3%), 사회복지계열 전문가(70.4%), 전담공무원(32.0%)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의 약 75%는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반면, 전담공무원은 경기부양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임으로써 전문가와 공무원 간에 뚜렷한 인식 차이가 존재

〔그림 5-7〕 향후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 취약계층 생계지원 vs 경기부양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향후 대책의 지원대상자 범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 전체적으로는 '피해를 입고 소득 및 재산이 낮은 국민'(45.7%), '피해 여부와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전국민'(34.6%),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8.6%),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이 낮은 국민'(7.4%), '기타'(3.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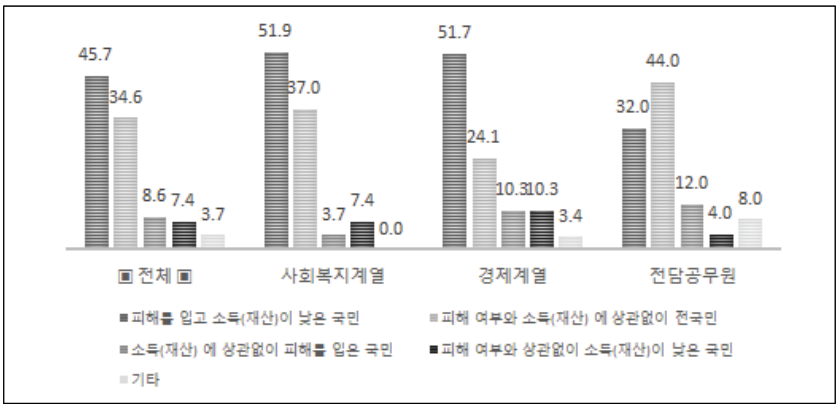
-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와 경제계열 전문가는 '피해를 입고 소득 및 재산이 낮은 국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담공무원은 '피해 여부와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전술한 것과 같이 지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중시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소득(재산)이 낮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경기부양을 강조한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대상으로는 '절대빈곤 이하 계층', '전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기부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소득감소 가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제시

○ 피해와 소득(재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한편, 전국민 대상의 완전 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열 전문가(37.0%)가 경제계열 전문가(24.1%)보다 강한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그림 5-8〕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자 범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본 조사에서는 상기 문항에서 '피해 여부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국민'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귀하가 정책결정자라고 가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음.

○ 말하자면 상기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질문한 셈인데, 각 유형별 선정기준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소득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삼을 경우 소득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75%, 80%, 100%가 제시되었고,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소득에 비례(sliding scale)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두 번째로 소득(및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피해의 정도(소득 감소의 정도)는 '전년 대비 10% 이상'에서 '전년 대비 25% 이상'까지의 기준이 제시되었음.

○ 세 번째로,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합이 제시되었는데(아래 표 참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층 중 전년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하자는 가장 보수적인 접근에서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계층 중 20%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까지 분포함.

- 이들 응답으로부터 한 가지 특이할 만 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소득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도 소득의 상한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상한과 동일(기준 중위소득의 100%)하다는 점임.

○ 구체적인 소득(및 재산) 기준이나 피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있음.

- 국가의 방역대책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 중에서 소득이 감소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지출규모를 우선 결정한 후 그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을 선택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음.

〈표 5-2〉 주요 지원 대상 유형별 구체적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소득(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피해 기준	전년 대비 소득 10% ~30% 이상	
소득과 피해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피해(소득 감소)
	100% 이하	20% ~ 30% 이상
	80% 이하	20% ~ 5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5% 이하	30% 이상
	60% 이하	50% 이상
	50% 이하	20 ~ 50% 이상
기타	- 지출 가능한 예산규모 결정 후 선정 기준 결정 -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우선시하되, 큰 폭으로 소득 감소한 소득 중간층까지 지원 - 국가 방역대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를 우선시하되, 고용보험 사각지대(기타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등)에 있으면서 소득이 감소한 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상기 문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가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음.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단위로 지급되면서 가구분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일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가구단위보다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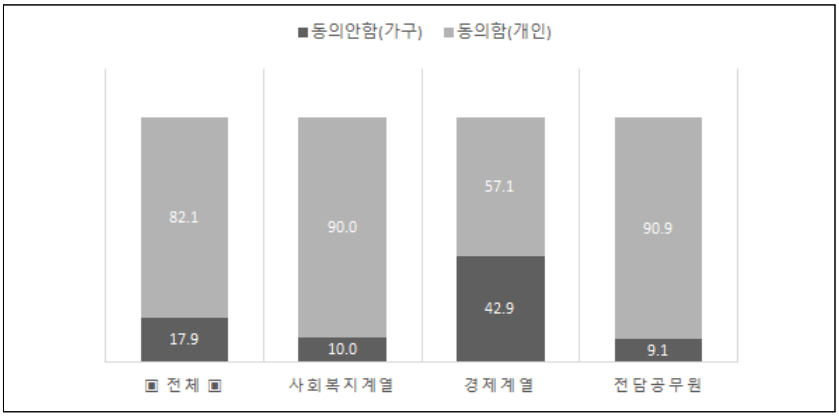
○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2.1%의 절대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계열 전문가와 전담공무원은 약 90%가 이에 동의한 반면,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7.1%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계열별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9] 지급대상 단위를 개인으로 해야 한다

(단위: %)



주: 사례 수 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선별을 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 전체적으로 7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계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평균적으로 82.1%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음.

-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71.4%로 전문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선별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1.7%의 찬성률을 보였음.

- 계열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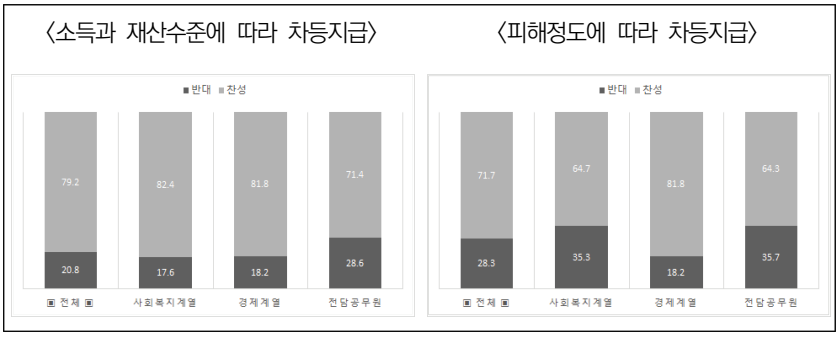
전담공무원은 약 64% 이상이 찬성하는 반면,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81.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경제계열 전문가의 선호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공평성에 부합하기 때문, 국가의 방역정책을 잘 이행한 결과이므로,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반면, 반대의 근거는 비효율성(피해 정도 파악에 드는 비용 고려), 형평성(피해 정도가 유사하더라도 자산 등 경제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 실효성(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차등의 의미가 퇴색)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림 5-10] 선별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단위: %)



주: 사례 수 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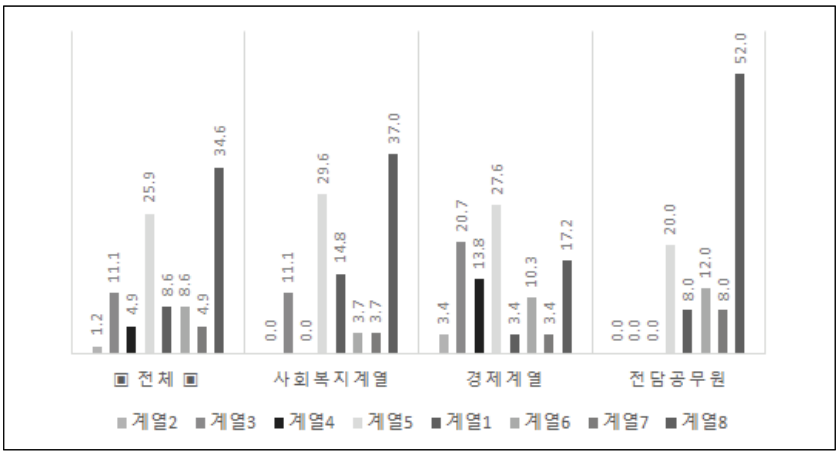
□ 향후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계층 10분위로 나눌 때, 중 어느 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음.

○ 전체적으로 100%까지,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50%가 25.9%, 30%가 11.1%로 각각 나타남.

- 전문가의 계열별로는 비교적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100%가 37.0%, 50%가 29.6%, 60%가 14.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50%가 2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가 20.7%, 100%가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절반이상인 52.0%가 100%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50%가 20.0%, 70%가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앞선 문항에서도 소득(재산)이나 피해정도와 무관하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문가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원의 목적을 취약계층 지원보다 경기부양에 두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5-11〕 향후 지급대상의 범위

(단위: %)



주: 계열2=20%, 계열3=30%, 계열4=40%, 계열5=50%, 계열6=60%, 계열7=70%, 계열8=80%, 계열9=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향후 지원 대책에 있어서 지급수단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소비쿠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 전체적으로 현금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55.6%로 나타남.

- 한편,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70.4%가 현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 반면,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64.0%가 소비쿠폰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음.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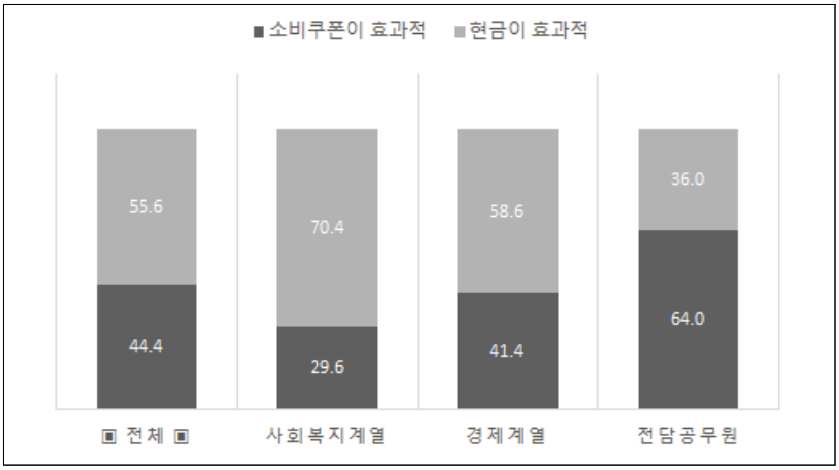
○ 현금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전문가 계열별로 살펴보면,

- 먼저,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현금이 지출의 유연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표적 집단의 경우 현금이 더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소비쿠폰 등이 유용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경제계열 전문가들의 경우도 역시 사용처(업종)와 사용지역의 제한이 없는 현금이 개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하는데 보다 효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5-12] 향후 지급시 효과적인 지급 수단: 현금 vs 소비쿠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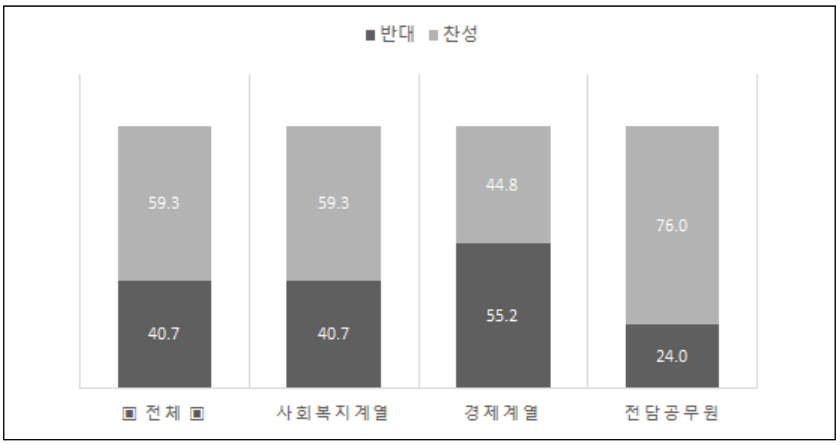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난지원 수단의 효과성(유용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현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하였음.

○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9.3%가 찬성하였으며, 경제계열 전문가의 찬성 비율은 44.8%로 전체에 비해 낮았고, 전담공무원의 경우는 76.0%가 찬성하여 전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음.

〔그림 5-13〕 중앙정부는 현금, 지방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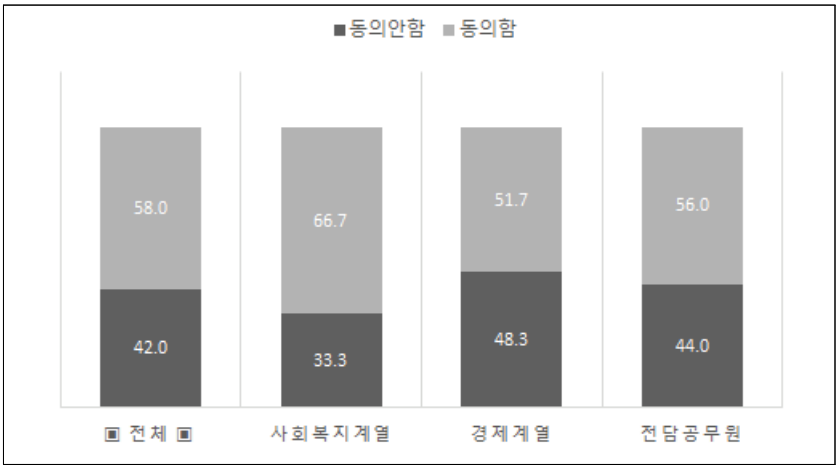
□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지급할 경우 중복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 전체적으로 58.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찬성(51.7%)과 반대(48.3%)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찬성이 66.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담공무원은 전체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5-14〕 중앙과 지방의 지원 중복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야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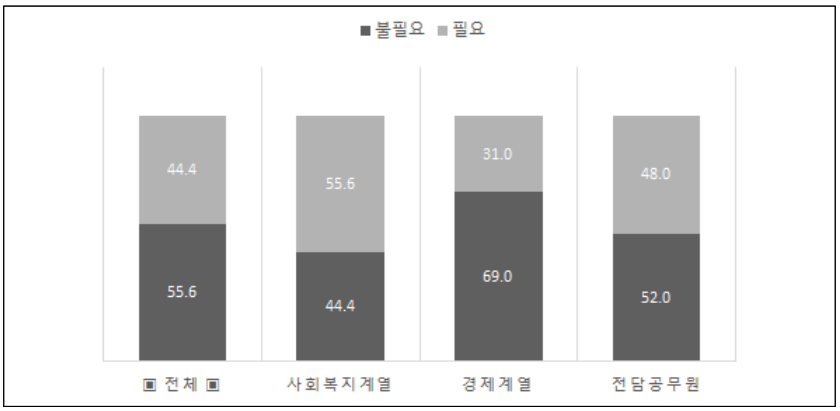
□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를 해당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

○ 전체적으로 44.4%가 필요하다고 보아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계열 전문가의 경우는 55.6%가 필요하다고 본 반면, 경제계열 전문가(31.0%)와 전담공무원(48.0%)은 절반 이하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열별 인식의 차이가 존재
- 특히 경제계열 전문가의 경우 사용처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15〕 소비쿠폰 지급시 사용처 지역제한의 필요성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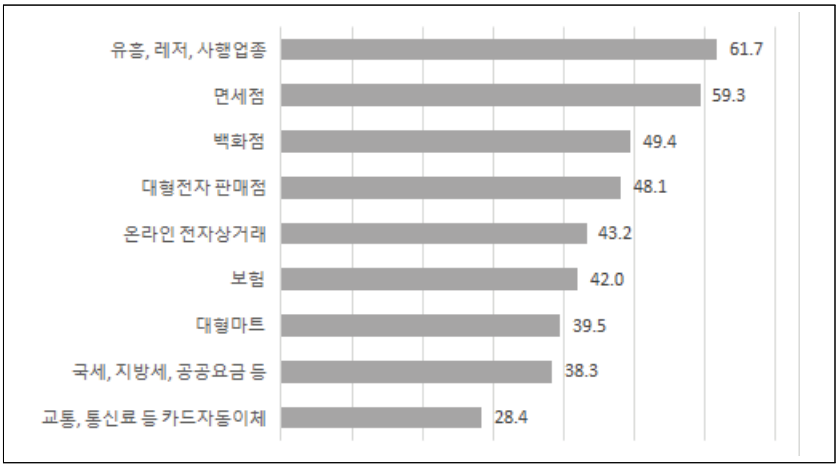
□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업종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 계열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흥주점,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 레저, 사행업종'(61.7%), '면세점'(59.3%), '백화점'(49.4%), '대형전자 판매점'(48.1%), '온라인 전자상거래'(43.2%),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42.0%),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39.5%),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 조세, 공공요금 업종'(38.3%),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28.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흥·레저·사행, 사치재 혹은 내구재 소비에 대한 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필품과 같은 생계에 필요한 소비지출이나 비소비지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16〕 소비쿠폰 지급시 사용처 업종별 제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다. 행정적 측면: 전담공무원

□ 일선 현장에서 재난지원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절반 이상인 52.0%의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40.0%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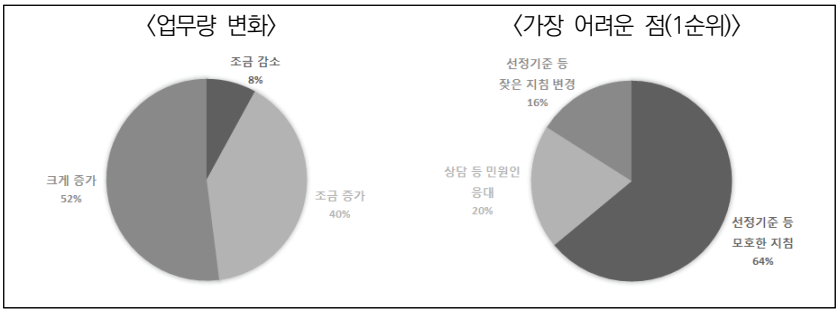
□ 재난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

○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 등 민원인 응대'가 20.0%, 그리고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이 16.0%를 차지했다.

- 지침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지 않고 설문함에 따라 어떤 지원사업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앞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별 없는 보편적 지원을 전문가집단에 비해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업무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17〕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변화와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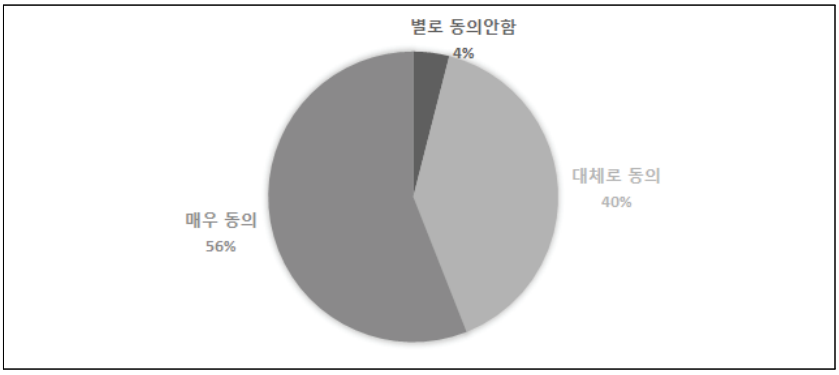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 지원대상을 선별할 경우 많은 시간과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 일선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대부분의 전담공무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8〕 지원 대상 선별 시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의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원자료.

참고문헌

김태완, 전지현. (2016).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보도자료. 2020.8.11.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록

1. 「제7기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명단

구분	지역	이름	기관명
1	서울	김정희	광진구청
2	서울	임영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3	서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서울	김금순	광진구청
5	경기	이상복	광주시노인복지관
6	경기	서경애	광명시청
7	경기	최재권	고양시청
8	경기	이수남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9	인천	김선숙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10	인천	이정석	부평5동행정복지센터
11	인천	조기은	서구청
12	강원	남궁명	홍천군 서석면사무소
13	강원	조정현	강원광역자활센터
14	충남	김연실	서천군 종천면사무소
15	충남	김영숙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16	충남	최은희	충남복지재단
17	충남	허수자	서천군청
18	광주	김진호	광산구청
19	대전	김성회	대전광역시 동구청
20	경북	박설희	울진군청
21	경북	이동형	안동시청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22	경남	문형규	의령읍행정복지센터
23	경남	조만선	산청군청
24	부산	최영월	부산 남구청
25	전북	강원선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주민센터
26	전북	곽동순	전주시 풍남동 주민센터
27	전북	김영순	군산시청
28	전북	마형준	장수군 천천면사무소
29	전북	이명숙	임실군청
30	전남	박성렬	영광군 불갑면사무소
31	제주	김근영	제주시청
32	제주	황영호	화북동 주민센터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전담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표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81)**	**100.0**
계열		
전문가	(56)	69.1
전담공무원	(25)	30.9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3.3
경제계열	(29)	35.8
전담공무원	(25)	30.9
연령대		
40대	(21)	25.9
50대	(49)	60.5
60대 이상	(11)	13.6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42.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43.2
보수적인 편	(12)	14.8

〈부표 1〉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책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①+② 동의 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3.7	12.3	16.0	43.2	40.7	84.0	100.0	3.21	0.80
계열										
전문가	(56)	5.4	14.3	19.6	44.6	35.7	80.4	100.0	3.11	0.85
전담공무원	(25)	0.0	8.0	8.0	40.0	52.0	92.0	100.0	3.44	0.65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7	14.8	18.5	48.1	33.3	81.5	100.0	3.11	0.80
경제계열	(29)	6.9	13.8	20.7	41.4	37.9	79.3	100.0	3.10	0.90
전담공무원	(25)	0.0	8.0	8.0	40.0	52.0	92.0	100.0	3.44	0.65
연령대										
40대	(21)	4.8	14.3	19.0	33.3	47.6	81.0	100.0	3.24	0.89
50대	(49)	4.1	12.2	16.3	40.8	42.9	83.7	100.0	3.22	0.82
60대 이상	(11)	0.0	9.1	9.1	72.7	18.2	90.9	100.0	3.09	0.54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0.0	2.9	2.9	35.3	61.8	97.1	100.0	3.59	0.56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20.0	25.7	51.4	22.9	74.3	100.0	2.91	0.82
보수적인 편	(12)	8.3	16.7	25.0	41.7	33.3	75.0	100.0	3.00	0.95

〈부표 2〉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액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①+② 동의 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2.5	12.3	14.8	69.1	16.0	85.2	100.0	2.99	0.62
계열										
전문가	(56)	3.6	12.5	16.1	73.2	10.7	83.9	100.0	2.91	0.61
전담공무원	(25)	0.0	12.0	12.0	60.0	28.0	88.0	100.0	3.16	0.62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0.0	18.5	18.5	66.7	14.8	81.5	100.0	2.96	0.59
경제계열	(29)	6.9	6.9	13.8	79.3	6.9	86.2	100.0	2.86	0.64
전담공무원	(25)	0.0	12.0	12.0	60.0	28.0	88.0	100.0	3.16	0.62
연령대										
40대	(21)	0.0	19.0	19.0	57.1	23.8	81.0	100.0	3.05	0.67
50대	(49)	4.1	12.2	16.3	67.3	16.3	83.7	100.0	2.96	0.68
60대 이상	(11)	0.0	0.0	0.0	100.0	0.0	100.0	100.0	3.00	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0.0	5.9	5.9	76.5	17.6	94.1	100.0	3.12	0.48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14.3	20.0	65.7	14.3	80.0	100.0	2.89	0.72
보수적인 편	(12)	0.0	25.0	25.0	58.3	16.7	75.0	100.0	2.92	0.67

〈부표 3〉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1인 가구

(단위 : %)

Base=1차 긴급재난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2)	8.3	41.7	25.0	8.3	16.7	100.0	44.55	32.05
계열									
전문가	(9)	11.1	33.3	22.2	11.1	22.2	100.0	50.00	36.25
전담공무원	(3)	0.0	66.7	33.3	0.0	0.0	100.0	30.0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5)	0.0	40.0	40.0	20.0	0.0	100.0	38.00	21.68
경제계열	(4)	25.0	25.0	0.0	0.0	50.0	100.0	70.00	51.96
전담공무원	(3)	0.0	66.7	33.3	0.0	0.0	100.0	30.00	10.00
연령대									
40대	(4)	0.0	50.0	25.0	0.0	25.0	100.0	50.00	35.59
50대	(8)	12.5	37.5	25.0	12.5	12.5	100.0	41.43	32.37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2)	0.0	0.0	0.0	50.0	50.0	100.0	80.00	28.28
진보도 보수도 아님	(7)	14.3	42.9	28.6	0.0	14.3	100.0	40.00	33.47
보수적인 편	(3)	0.0	66.7	33.3	0.0	0.0	100.0	30.00	17.32

〈부표 4〉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2인 가구

(단위 : %)

Base=1차 긴급재난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2)	8.3	16.7	16.7	25.0	33.3	100.0	72.91	45.65
계열									
전문가	(9)	11.1	22.2	11.1	11.1	44.4	100.0	80.25	52.09
전담공무원	(3)	0.0	0.0	33.3	66.7	0.0	100.0	53.33	11.55
전공									
사회복지계열	(5)	0.0	20.0	20.0	20.0	40.0	100.0	67.00	35.99
경제계열	(4)	25.0	25.0	0.0	0.0	50.0	100.0	102.33	75.74
전담공무원	(3)	0.0	0.0	33.3	66.7	0.0	100.0	53.33	11.55
연령대									
40대	(4)	0.0	0.0	25.0	50.0	25.0	100.0	79.25	44.22
50대	(8)	12.5	25.0	12.5	12.5	37.5	100.0	69.29	49.53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2)	0.0	0.0	0.0	0.0	100.0	100.0	121.00	29.70
진보도 보수도 아님	(7)	14.3	28.6	0.0	28.6	28.6	100.0	67.50	50.97
보수적인 편	(3)	0.0	0.0	66.7	33.3	0.0	100.0	51.67	20.21

〈부표 5〉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3인 가구

(단위 : %)

Base=1차 긴급재난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40~60 만원 미만	60~80 만원 미만	80~100 만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12)	8.3	8.3	8.3	16.7	16.7	41.7	100.0	100.27	56.95
계열										
전문가	(9)	11.1	11.1	11.1	11.1	0.0	55.6	100.0	109.13	65.10
전담공무원	(3)	0.0	0.0	0.0	33.3	66.7	0.0	100.0	76.67	15.28
전공										
사회복지계열	(5)	0.0	0.0	20.0	20.0	0.0	60.0	100.0	96.00	46.15
경제계열	(4)	25.0	25.0	0.0	0.0	0.0	50.0	100.0	131.00	97.07
전담공무원	(3)	0.0	0.0	0.0	33.3	66.7	0.0	100.0	76.67	15.28
연령대										
40대	(4)	0.0	0.0	0.0	25.0	25.0	50.0	100.0	105.75	47.95
50대	(8)	12.5	12.5	12.5	12.5	12.5	37.5	100.0	97.14	64.99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2)	0.0	0.0	0.0	0.0	0.0	100.0	100.0	151.50	30.41
진보도 보수도 아님	(7)	14.3	14.3	14.3	0.0	28.6	28.6	100.0	96.67	67.72
보수적인 편	(3)	0.0	0.0	0.0	66.7	0.0	33.3	100.0	73.33	23.09

〈부표 6〉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4인 가구

(단위 : %)

Base=1차 긴급재난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12)	8.3	8.3	8.3	16.7	58.3	100.0	127.27	68.53
계열									
전문가	(9)	11.1	11.1	11.1	11.1	55.6	100.0	137.50	78.47
전담공무원	(3)	0.0	0.0	0.0	33.3	66.7	100.0	100.00	2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5)	0.0	0.0	20.0	20.0	60.0	100.0	125.00	57.23
경제계열	(4)	25.0	25.0	0.0	0.0	50.0	100.0	158.33	118.15
전담공무원	(3)	0.0	0.0	0.0	33.3	66.7	100.0	100.00	20.00
연령대									
40대	(4)	0.0	0.0	0.0	25.0	75.0	100.0	131.25	50.06
50대	(8)	12.5	12.5	12.5	12.5	50.0	100.0	125.00	80.98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2)	0.0	0.0	0.0	0.0	100.0	100.0	180.00	28.28
진보도 보수도 아님	(7)	14.3	14.3	14.3	0.0	57.1	100.0	125.83	85.00
보수적인 편	(3)	0.0	0.0	0.0	66.7	33.3	100.0	95.00	25.98

〈부표 7〉 [가. 대책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5인 가구

(단위 : %)

Base=1차 긴급재난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2)	8.3	8.3	8.3	75.0	100.0	154.00	80.37
계열								
전문가	(9)	11.1	11.1	11.1	66.7	100.0	165.50	92.16
전담공무원	(3)	0.0	0.0	0.0	100.0	100.0	123.33	25.17
전공								
사회복지계열	(5)	0.0	0.0	20.0	80.0	100.0	154.00	68.77
경제계열	(4)	25.0	25.0	0.0	50.0	100.0	184.67	139.23
전담공무원	(3)	0.0	0.0	0.0	100.0	100.0	123.33	25.17
연령대								
40대	(4)	0.0	0.0	0.0	100.0	100.0	156.00	51.09
50대	(8)	12.5	12.5	12.5	62.5	100.0	152.86	97.25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2)	0.0	0.0	0.0	100.0	100.0	207.00	24.04
진보도 보수도 아님	(7)	14.3	14.3	14.3	57.1	100.0	155.00	102.52
보수적인 편	(3)	0.0	0.0	0.0	100.0	100.0	116.67	28.87

〈부표 8〉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책이 적절하다는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4.9	27.2	32.1	58.0	9.9	67.9	100.0	2.73	0.71
계열										
전문가	(56)	0.0	25.0	25.0	64.3	10.7	75.0	100.0	2.86	0.59
전담공무원	(25)	16.0	32.0	48.0	44.0	8.0	52.0	100.0	2.44	0.87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0.0	33.3	33.3	48.1	18.5	66.7	100.0	2.85	0.72
경제계열	(29)	0.0	17.2	17.2	79.3	3.4	82.8	100.0	2.86	0.44
전담공무원	(25)	16.0	32.0	48.0	44.0	8.0	52.0	100.0	2.44	0.87
연령대										
40대	(21)	4.8	28.6	33.3	47.6	19.0	66.7	100.0	2.81	0.81
50대	(49)	6.1	26.5	32.7	61.2	6.1	67.3	100.0	2.67	0.69
60대 이상	(11)	0.0	27.3	27.3	63.6	9.1	72.7	100.0	2.82	0.6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5.9	35.3	41.2	50.0	8.8	58.8	100.0	2.62	0.74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20.0	25.7	62.9	11.4	74.3	100.0	2.80	0.72
보수적인 편	(12)	0.0	25.0	25.0	66.7	8.3	75.0	100.0	2.83	0.58

〈부표 9〉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금액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1.2	17.3	18.5	67.9	13.6	81.5	100.0	2.94	0.60
계열										
전문가	(56)	1.8	19.6	21.4	69.6	8.9	78.6	100.0	2.86	0.59
전담공무원	(25)	0.0	12.0	12.0	64.0	24.0	88.0	100.0	3.12	0.6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0.0	25.9	25.9	59.3	14.8	74.1	100.0	2.89	0.64
경제계열	(29)	3.4	13.8	17.2	79.3	3.4	82.8	100.0	2.83	0.54
전담공무원	(25)	0.0	12.0	12.0	64.0	24.0	88.0	100.0	3.12	0.60
연령대										
40대	(21)	0.0	19.0	19.0	61.9	19.0	81.0	100.0	3.00	0.63
50대	(49)	2.0	16.3	18.4	69.4	12.2	81.6	100.0	2.92	0.61
60대 이상	(11)	0.0	18.2	18.2	72.7	9.1	81.8	100.0	2.91	0.54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0.0	11.8	11.8	73.5	14.7	88.2	100.0	3.03	0.52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9	25.7	28.6	57.1	14.3	71.4	100.0	2.83	0.71
보수적인 편	(12)	0.0	8.3	8.3	83.3	8.3	91.7	100.0	3.00	0.43

〈부표 10〉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1인 가구

(단위 : %)

Base=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	13.3	26.7	26.7	33.3	100.0	58.46	36.71
계열								
전문가	(12)	16.7	16.7	25.0	41.7	100.0	68.00	36.15
전담공무원	(3)	0.0	66.7	33.3	0.0	100.0	26.67	15.28
전공								
사회복지계열	(7)	0.0	14.3	42.9	42.9	100.0	65.71	35.05
경제계열	(5)	40.0	20.0	0.0	40.0	100.0	73.33	46.19
전담공무원	(3)	0.0	66.7	33.3	0.0	100.0	26.67	15.28
연령대								
40대	(4)	25.0	25.0	25.0	25.0	100.0	60.00	36.06
50대	(9)	11.1	33.3	33.3	22.2	100.0	47.50	36.15
60대 이상	(2)	0.0	0.0	0.0	100.0	100.0	100.00	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4)	25.0	0.0	25.0	50.0	100.0	83.33	28.87
진보도 보수도 아님	(10)	10.0	40.0	20.0	30.0	100.0	51.11	38.87
보수적인 편	(1)	0.0	0.0	100.0	0.0	100.0	50.00	

〈부표 11〉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2인 가구

(단위 : %)

Base=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	13.3	20.0	20.0	6.7	40.0	100.0	91.54	53.40
계열									
전문가	(12)	16.7	16.7	8.3	8.3	50.0	100.0	105.00	53.02
전담공무원	(3)	0.0	33.3	66.7	0.0	0.0	100.0	46.67	23.09
전공									
사회복지계열	(7)	0.0	14.3	14.3	14.3	57.1	100.0	103.57	49.73
경제계열	(5)	40.0	20.0	0.0	0.0	40.0	100.0	108.33	72.17
전담공무원	(3)	0.0	33.3	66.7	0.0	0.0	100.0	46.67	23.09
연령대									
40대	(4)	25.0	0.0	50.0	0.0	25.0	100.0	95.00	48.22
50대	(9)	11.1	33.3	11.1	11.1	33.3	100.0	75.63	54.34
60대 이상	(2)	0.0	0.0	0.0	0.0	100.0	100.0	150.00	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4)	25.0	0.0	0.0	25.0	50.0	100.0	126.67	40.41
진보도 보수도 아님	(10)	10.0	30.0	20.0	0.0	40.0	100.0	81.67	57.12
보수적인 편	(1)	0.0	0.0	100.0	0.0	0.0	100.0	75.00	

〈부표 12〉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3인 가구

(단위 : %)

Base=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	13.3	13.3	6.7	13.3	53.3	100.0	124.62	69.83
계열									
전문가	(12)	16.7	8.3	8.3	0.0	66.7	100.0	142.00	69.41
전담공무원	(3)	0.0	33.3	0.0	66.7	0.0	100.0	66.67	32.15
전공									
사회복지계열	(7)	0.0	0.0	14.3	0.0	85.7	100.0	141.43	63.36
경제계열	(5)	40.0	20.0	0.0	0.0	40.0	100.0	143.33	98.15
전담공무원	(3)	0.0	33.3	0.0	66.7	0.0	100.0	66.67	32.15
연령대									
40대	(4)	25.0	0.0	0.0	25.0	50.0	100.0	130.00	60.83
50대	(9)	11.1	22.2	11.1	11.1	44.4	100.0	103.75	71.90
60대 이상	(2)	0.0	0.0	0.0	0.0	100.0	100.0	200.00	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4)	25.0	0.0	0.0	0.0	75.0	100.0	166.67	57.74
진보도 보수도 아님	(10)	10.0	20.0	10.0	20.0	40.0	100.0	113.33	74.83
보수적인 편	(1)	0.0	0.0	0.0	0.0	100.0	100.0	100.00	

〈부표 13〉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4인 가구

(단위 : %)

Base=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	13.3	6.7	6.7	6.7	66.7	100.0	163.85	91.27
계열									
전문가	(12)	16.7	8.3	0.0	8.3	66.7	100.0	187.00	90.22
전담공무원	(3)	0.0	0.0	33.3	0.0	66.7	100.0	86.67	41.63
전공									
사회복지계열	(7)	0.0	0.0	0.0	14.3	85.7	100.0	190.71	83.79
경제계열	(5)	40.0	20.0	0.0	0.0	40.0	100.0	178.33	124.13
전담공무원	(3)	0.0	0.0	33.3	0.0	66.7	100.0	86.67	41.63
연령대									
40대	(4)	25.0	0.0	0.0	0.0	75.0	100.0	165.00	73.65
50대	(9)	11.1	11.1	11.1	11.1	55.6	100.0	135.63	90.06
60대 이상	(2)	0.0	0.0	0.0	0.0	100.0	100.0	275.00	35.36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4)	25.0	0.0	0.0	0.0	75.0	100.0	216.67	57.74
진보도 보수도 아님	(10)	10.0	10.0	10.0	10.0	60.0	100.0	150.56	101.13
보수적인 편	(1)	0.0	0.0	0.0	0.0	100.0	100.0	125.00	

〈부표 14〉 [가. 대책평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액_5인 가구

(단위 : %)

Base=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적절하지 않음	사례수 (명)	지급에 동의하지 않음	40~6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	13.3	13.3	6.7	66.7	100.0	199.23	111.39
계열								
전문가	(12)	16.7	8.3	8.3	66.7	100.0	227.00	110.66
전담공무원	(3)	0.0	33.3	0.0	66.7	100.0	106.67	51.32
전공								
사회복지계열	(7)	0.0	0.0	14.3	85.7	100.0	240.00	106.61
경제계열	(5)	40.0	20.0	0.0	40.0	100.0	196.67	137.96
전담공무원	(3)	0.0	33.3	0.0	66.7	100.0	106.67	51.32
연령대								
40대	(4)	25.0	0.0	0.0	75.0	100.0	200.00	86.60
50대	(9)	11.1	22.2	11.1	55.6	100.0	161.25	101.34
60대 이상	(2)	0.0	0.0	0.0	100.0	100.0	350.00	70.71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4)	25.0	0.0	0.0	75.0	100.0	266.67	57.74
진보도 보수도 아님	(10)	10.0	20.0	10.0	60.0	100.0	182.22	124.28
보수적인 편	(1)	0.0	0.0	0.0	100.0	100.0	150.00	

〈부표 15〉 [가. 대책평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대책이 적절하다는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2.5	22.2	24.7	61.7	13.6	75.3	100.0	2.86	0.67
계열										
전문가	(56)	1.8	23.2	25.0	64.3	10.7	75.0	100.0	2.84	0.63
전담공무원	(25)	4.0	20.0	24.0	56.0	20.0	76.0	100.0	2.92	0.76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7	22.2	25.9	59.3	14.8	74.1	100.0	2.85	0.72
경제계열	(29)	0.0	24.1	24.1	69.0	6.9	75.9	100.0	2.83	0.54
전담공무원	(25)	4.0	20.0	24.0	56.0	20.0	76.0	100.0	2.92	0.76
연령대										
40대	(21)	0.0	14.3	14.3	66.7	19.0	85.7	100.0	3.05	0.59
50대	(49)	4.1	18.4	22.4	65.3	12.2	77.6	100.0	2.86	0.68
60대 이상	(11)	0.0	54.5	54.5	36.4	9.1	45.5	100.0	2.55	0.69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9	17.6	20.6	67.6	11.8	79.4	100.0	2.88	0.64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9	22.9	25.7	57.1	17.1	74.3	100.0	2.89	0.72
보수적인 편	(12)	0.0	33.3	33.3	58.3	8.3	66.7	100.0	2.75	0.62

〈부표 16〉 [가. 대책평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다는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28.4	28.4	58.0	13.6	71.6	100.0	2.85	0.63
계열									
전문가	(56)	32.1	32.1	55.4	12.5	67.9	100.0	2.80	0.64
전담공무원	(25)	20.0	20.0	64.0	16.0	80.0	100.0	2.96	0.61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3.3	33.3	48.1	18.5	66.7	100.0	2.85	0.72
경제계열	(29)	31.0	31.0	62.1	6.9	69.0	100.0	2.76	0.58
전담공무원	(25)	20.0	20.0	64.0	16.0	80.0	100.0	2.96	0.61
연령대									
40대	(21)	38.1	38.1	47.6	14.3	61.9	100.0	2.76	0.70
50대	(49)	24.5	24.5	59.2	16.3	75.5	100.0	2.92	0.64
60대 이상	(11)	27.3	27.3	72.7	0.0	72.7	100.0	2.73	0.47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6.5	26.5	55.9	17.6	73.5	100.0	2.91	0.67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0.0	20.0	65.7	14.3	80.0	100.0	2.94	0.59
보수적인 편	(12)	58.3	58.3	41.7	0.0	41.7	100.0	2.42	0.51

〈부표 17〉 [가. 대책평가]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6.2	37.0	43.2	44.4	12.3	56.8	100.0	2.63	0.78
계열										
전문가	(56)	7.1	39.3	46.4	48.2	5.4	53.6	100.0	2.52	0.71
전담공무원	(25)	4.0	32.0	36.0	36.0	28.0	64.0	100.0	2.88	0.88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7.4	33.3	40.7	51.9	7.4	59.3	100.0	2.59	0.75
경제계열	(29)	6.9	44.8	51.7	44.8	3.4	48.3	100.0	2.45	0.69
전담공무원	(25)	4.0	32.0	36.0	36.0	28.0	64.0	100.0	2.88	0.88
연령대										
40대	(21)	4.8	42.9	47.6	42.9	9.5	52.4	100.0	2.57	0.75
50대	(49)	6.1	36.7	42.9	40.8	16.3	57.1	100.0	2.67	0.83
60대 이상	(11)	9.1	27.3	36.4	63.6	0.0	63.6	100.0	2.55	0.69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9	38.2	41.2	47.1	11.8	58.8	100.0	2.68	0.73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8.6	28.6	37.1	48.6	14.3	62.9	100.0	2.69	0.83
보수적인 편	(12)	8.3	58.3	66.7	25.0	8.3	33.3	100.0	2.33	0.78

〈부표 18〉 [가. 대책평가] 아동돌봄 쿠폰이 적절하다는 데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4.9	32.1	37.0	49.4	13.6	63.0	100.0	2.72	0.76
계열										
전문가	(56)	5.4	30.4	35.7	55.4	8.9	64.3	100.0	2.68	0.72
전담공무원	(25)	4.0	36.0	40.0	36.0	24.0	60.0	100.0	2.80	0.87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7.4	29.6	37.0	44.4	18.5	63.0	100.0	2.74	0.86
경제계열	(29)	3.4	31.0	34.5	65.5	0.0	65.5	100.0	2.62	0.56
전담공무원	(25)	4.0	36.0	40.0	36.0	24.0	60.0	100.0	2.80	0.87
연령대										
40대	(21)	4.8	38.1	42.9	42.9	14.3	57.1	100.0	2.67	0.80
50대	(49)	6.1	32.7	38.8	44.9	16.3	61.2	100.0	2.71	0.82
60대 이상	(11)	0.0	18.2	18.2	81.8	0.0	81.8	100.0	2.82	0.4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0.0	29.4	29.4	52.9	17.6	70.6	100.0	2.88	0.69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34.3	40.0	45.7	14.3	60.0	100.0	2.69	0.80
보수적인 편	(12)	16.7	33.3	50.0	50.0	0.0	50.0	100.0	2.33	0.78

〈부표 19〉 [가. 대책평가] 2차 재난지원 대책의 전체적인 적절성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8.6	16.0	24.7	63.0	12.3	75.3	100.0	2.79	0.77
계열										
전문가	(56)	5.4	16.1	21.4	67.9	10.7	78.6	100.0	2.84	0.68
전담공무원	(25)	16.0	16.0	32.0	52.0	16.0	68.0	100.0	2.68	0.95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7	25.9	29.6	66.7	3.7	70.4	100.0	2.70	0.61
경제계열	(29)	6.9	6.9	13.8	69.0	17.2	86.2	100.0	2.97	0.73
전담공무원	(25)	16.0	16.0	32.0	52.0	16.0	68.0	100.0	2.68	0.95
연령대										
40대	(21)	4.8	14.3	19.0	66.7	14.3	81.0	100.0	2.90	0.70
50대	(49)	12.2	16.3	28.6	59.2	12.2	71.4	100.0	2.71	0.84
60대 이상	(11)	0.0	18.2	18.2	72.7	9.1	81.8	100.0	2.91	0.54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1.8	20.6	32.4	52.9	14.7	67.6	100.0	2.71	0.87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14.3	20.0	68.6	11.4	80.0	100.0	2.86	0.69
보수적인 편	(12)	8.3	8.3	16.7	75.0	8.3	83.3	100.0	2.83	0.72

〈부표 20〉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1순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구직지원금)	아동돌폼 쿠폰	계
▣ 전체 ▣	(81)	45.7	38.3	9.9	3.7	2.5	100.0
계열							
전문가	(56)	58.9	28.6	8.9	0.0	3.6	100.0
전담공무원	(25)	16.0	60.0	12.0	12.0	0.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59.3	25.9	14.8	0.0	0.0	100.0
경제계열	(29)	58.6	31.0	3.4	0.0	6.9	100.0
전담공무원	(25)	16.0	60.0	12.0	12.0	0.0	100.0
연령대							
40대	(21)	42.9	47.6	9.5	0.0	0.0	100.0
50대	(49)	44.9	32.7	12.2	6.1	4.1	100.0
60대 이상	(11)	54.5	45.5	0.0	0.0	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44.1	35.3	14.7	5.9	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45.7	37.1	8.6	2.9	5.7	100.0
보수적인 편	(12)	50.0	50.0	0.0	0.0	0.0	100.0

〈부표 21〉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2순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구직지원금)	아동돌품 쿠폰	계
▣ 전체 ▣	(81)	40.7	25.9	17.3	8.6	7.4	100.0
계열							
전문가	(56)	48.2	21.4	16.1	5.4	8.9	100.0
전담공무원	(25)	24.0	36.0	20.0	16.0	4.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44.4	25.9	11.1	7.4	11.1	100.0
경제계열	(29)	51.7	17.2	20.7	3.4	6.9	100.0
전담공무원	(25)	24.0	36.0	20.0	16.0	4.0	100.0
연령대							
40대	(21)	33.3	33.3	19.0	4.8	9.5	100.0
50대	(49)	44.9	22.4	16.3	10.2	6.1	100.0
60대 이상	(11)	36.4	27.3	18.2	9.1	9.1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41.2	23.5	17.6	2.9	14.7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37.1	31.4	14.3	17.1	0.0	100.0
보수적인 편	(12)	50.0	16.7	25.0	0.0	8.3	100.0

〈부표 22〉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3순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구직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돌품 쿠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계
▣ 전체 ▣	(81)	35.8	17.3	16.0	16.0	14.8	100.0
계열							
전문가	(56)	39.3	17.9	16.1	12.5	14.3	100.0
전담공무원	(25)	28.0	16.0	16.0	24.0	16.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3.3	18.5	18.5	11.1	18.5	100.0
경제계열	(29)	44.8	17.2	13.8	13.8	10.3	100.0
전담공무원	(25)	28.0	16.0	16.0	24.0	16.0	100.0
연령대							
40대	(21)	33.3	14.3	23.8	9.5	19.0	100.0
50대	(49)	34.7	20.4	12.2	18.4	14.3	100.0
60대 이상	(11)	45.5	9.1	18.2	18.2	9.1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35.3	14.7	20.6	11.8	17.6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34.3	22.9	11.4	14.3	17.1	100.0
보수적인 편	(12)	41.7	8.3	16.7	33.3	0.0	100.0

〈부표 23〉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4순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아동돌품 쿠폰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구직지원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계
▣ 전체 ▣	(81)	34.6	29.6	21.0	13.6	1.2	100.0
계열							
전문가	(56)	32.1	35.7	23.2	7.1	1.8	100.0
전담공무원	(25)	40.0	16.0	16.0	28.0	0.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3.3	33.3	25.9	7.4	0.0	100.0
경제계열	(29)	31.0	37.9	20.7	6.9	3.4	100.0
전담공무원	(25)	40.0	16.0	16.0	28.0	0.0	100.0
연령대							
40대	(21)	33.3	33.3	19.0	14.3	0.0	100.0
50대	(49)	32.7	28.6	22.4	14.3	2.0	100.0
60대 이상	(11)	45.5	27.3	18.2	9.1	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6.5	41.2	20.6	11.8	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42.9	22.9	14.3	17.1	2.9	100.0
보수적인 편	(12)	33.3	16.7	41.7	8.3	0.0	100.0

〈부표 24〉 [가. 대책평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할 정책_5순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구직지원금)	아동돌품 쿠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계
▣ 전체 ▣	(81)	40.7	39.5	7.4	7.4	4.9	100.0
계열							
전문가	(56)	41.1	42.9	1.8	7.1	7.1	100.0
전담공무원	(25)	40.0	32.0	20.0	8.0	0.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40.7	44.4	3.7	0.0	11.1	100.0
경제계열	(29)	41.4	41.4	0.0	13.8	3.4	100.0
전담공무원	(25)	40.0	32.0	20.0	8.0	0.0	100.0
연령대							
40대	(21)	47.6	47.6	0.0	4.8	0.0	100.0
50대	(49)	34.7	38.8	12.2	8.2	6.1	100.0
60대 이상	(11)	54.5	27.3	0.0	9.1	9.1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35.3	47.1	5.9	5.9	5.9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34.3	37.1	11.4	11.4	5.7	100.0
보수적인 편	(12)	75.0	25.0	0.0	0.0	0.0	100.0

〈부표 25〉 [나. 향후대책]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취약계층 생계지원	②	③	④	⑤	①+②+③+④+⑤ 취약계층 생계지원	⑥	⑦	⑧	⑨	⑩ 경기부양	⑥+⑦+⑧+⑨+⑩ 경기부양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22.2	14.8	12.3	6.2	6.2	61.7	1.2	3.7	9.9	7.4	16.0	38.3	100.0	4.84	3.44
계열																
전문가	(56)	30.4	19.6	16.1	5.4	3.6	75.0	1.8	1.8	7.1	7.1	7.1	25.0	100.0	3.73	3.09
전담공무원	(25)	4.0	4.0	4.0	8.0	12.0	32.0	0.0	8.0	16.0	8.0	36.0	68.0	100.0	7.32	2.87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8.5	29.6	11.1	7.4	3.7	70.4	3.7	3.7	11.1	3.7	7.4	29.6	100.0	4.04	3.03
경제계열	(29)	41.4	10.3	20.7	3.4	3.4	79.3	0.0	0.0	3.4	10.3	6.9	20.7	100.0	3.45	3.17
전담공무원	(25)	4.0	4.0	4.0	8.0	12.0	32.0	0.0	8.0	16.0	8.0	36.0	68.0	100.0	7.32	2.87
연령대																
40대	(21)	23.8	14.3	4.8	14.3	4.8	61.9	0.0	4.8	9.5	4.8	19.0	38.1	100.0	4.90	3.55
50대	(49)	22.4	16.3	14.3	2.0	4.1	59.2	2.0	2.0	10.2	10.2	16.3	40.8	100.0	4.90	3.55
60대 이상	(11)	18.2	9.1	18.2	9.1	18.2	72.7	0.0	9.1	9.1	0.0	9.1	27.3	100.0	4.45	2.91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7.6	14.7	17.6	8.8	2.9	61.8	2.9	0.0	11.8	5.9	17.6	38.2	100.0	4.91	3.42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5.7	14.3	11.4	2.9	8.6	62.9	0.0	8.6	8.6	8.6	11.4	37.1	100.0	4.63	3.38
보수적인 편	(12)	25.0	16.7	0.0	8.3	8.3	58.3	0.0	0.0	8.3	8.3	25.0	41.7	100.0	5.25	3.89

〈부표 26〉 [나. 향후대책] 가장 적절한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자 범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피해를 입고 소득(및 재산)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 여부와 소득(및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득(및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및 재산)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타	계
▣ 전체 ▣	(81)	45.7	34.6	8.6	7.4	3.7	100.0
계열							
전문가	(56)	51.8	30.4	7.1	8.9	1.8	100.0
전담공무원	(25)	32.0	44.0	12.0	4.0	8.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51.9	37.0	3.7	7.4	0.0	100.0
경제계열	(29)	51.7	24.1	10.3	10.3	3.4	100.0
전담공무원	(25)	32.0	44.0	12.0	4.0	8.0	100.0
연령대							
40대	(21)	52.4	23.8	9.5	14.3	0.0	100.0
50대	(49)	42.9	40.8	6.1	4.1	6.1	100.0
60대 이상	(11)	45.5	27.3	18.2	9.1	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35.3	44.1	5.9	11.8	2.9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4.3	25.7	8.6	5.7	5.7	100.0
보수적인 편	(12)	50.0	33.3	16.7	0.0	0.0	100.0

〈부표 27〉 [나. 향후대책] 전국민 대상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의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해야 한다.

(단위 : %)

Base=긴급재난 지원 전국민 지급해야함	사례수 (명)	① 매우 비동의	② 비동의	①+② 비동의	③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28)	3.6	14.3	17.9	28.6	53.6	82.1	100.0	3.32	0.86
계열										
전문가	(17)	5.9	17.6	23.5	35.3	41.2	76.5	100.0	3.12	0.93
전담공무원	(11)	0.0	9.1	9.1	18.2	72.7	90.9	100.0	3.64	0.67
전공										
사회복지계열	(10)	0.0	10.0	10.0	50.0	40.0	90.0	100.0	3.30	0.67
경제계열	(7)	14.3	28.6	42.9	14.3	42.9	57.1	100.0	2.86	1.21
전담공무원	(11)	0.0	9.1	9.1	18.2	72.7	90.9	100.0	3.64	0.67
연령대										
40대	(5)	0.0	0.0	0.0	20.0	80.0	100.0	100.0	3.80	0.45
50대	(20)	5.0	15.0	20.0	25.0	55.0	80.0	100.0	3.30	0.92
60대 이상	(3)	0.0	33.3	33.3	66.7	0.0	66.7	100.0	2.67	0.58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5)	0.0	20.0	20.0	13.3	66.7	80.0	100.0	3.47	0.83
진보도 보수도 아님	(9)	0.0	11.1	11.1	44.4	44.4	88.9	100.0	3.33	0.71
보수적인 편	(4)	25.0	0.0	25.0	50.0	25.0	75.0	100.0	2.75	1.26

〈부표 28〉 [나. 향후대책] 선별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단위 : %)

Base=긴급재난 지원 대상자 선별해야함	사례수 (명)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①+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③+④ 찬성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53)	1.9	18.9	20.8	50.9	28.3	79.2	100.0	3.06	0.74
계열										
전문가	(39)	2.6	15.4	17.9	51.3	30.8	82.1	100.0	3.10	0.75
전담공무원	(14)	0.0	28.6	28.6	50.0	21.4	71.4	100.0	2.93	0.73
전공										
사회복지계열	(17)	0.0	17.6	17.6	35.3	47.1	82.4	100.0	3.29	0.77
경제계열	(22)	4.5	13.6	18.2	63.6	18.2	81.8	100.0	2.95	0.72
전담공무원	(14)	0.0	28.6	28.6	50.0	21.4	71.4	100.0	2.93	0.73
연령대										
40대	(16)	0.0	12.5	12.5	62.5	25.0	87.5	100.0	3.13	0.62
50대	(29)	3.4	24.1	27.6	44.8	27.6	72.4	100.0	2.97	0.82
60대 이상	(8)	0.0	12.5	12.5	50.0	37.5	87.5	100.0	3.25	0.71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9)	5.3	26.3	31.6	42.1	26.3	68.4	100.0	2.89	0.88
진보도 보수도 아님	(26)	0.0	15.4	15.4	61.5	23.1	84.6	100.0	3.08	0.63
보수적인 편	(8)	0.0	12.5	12.5	37.5	50.0	87.5	100.0	3.38	0.74

〈부표 29〉 [나. 향후대책] 선별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단위 : %)

Base=긴급재난 지원 대상자 선별해야함	사례수 (명)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①+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③+④ 찬성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53)	1.9	26.4	28.3	56.6	15.1	71.7	100.0	2.85	0.69
계열										
전문가	(39)	2.6	23.1	25.6	59.0	15.4	74.4	100.0	2.87	0.70
전담공무원	(14)	0.0	35.7	35.7	50.0	14.3	64.3	100.0	2.79	0.70
전공										
사회복지계열	(17)	0.0	35.3	35.3	52.9	11.8	64.7	100.0	2.76	0.66
경제계열	(22)	4.5	13.6	18.2	63.6	18.2	81.8	100.0	2.95	0.72
전담공무원	(14)	0.0	35.7	35.7	50.0	14.3	64.3	100.0	2.79	0.70
연령대										
40대	(16)	0.0	31.3	31.3	56.3	12.5	68.8	100.0	2.81	0.66
50대	(29)	3.4	24.1	27.6	58.6	13.8	72.4	100.0	2.83	0.71
60대 이상	(8)	0.0	25.0	25.0	50.0	25.0	75.0	100.0	3.00	0.76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9)	5.3	31.6	36.8	57.9	5.3	63.2	100.0	2.63	0.68
진보도 보수도 아님	(26)	0.0	26.9	26.9	61.5	11.5	73.1	100.0	2.85	0.61
보수적인 편	(8)	0.0	12.5	12.5	37.5	50.0	87.5	100.0	3.38	0.74

〈부표 30〉 [나. 향후대책] 지급대상의 범위(10분위 기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명)	20%	30%	40%	50%	60%	70%	80%	100%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1.2	11.1	4.9	25.9	8.6	8.6	4.9	34.6	100.0	68.27	26.21
계열												
전문가	(56)	1.8	16.1	7.1	28.6	8.9	7.1	3.6	26.8	100.0	62.32	26.22
전담공무원	(25)	0.0	0.0	0.0	20.0	8.0	12.0	8.0	52.0	100.0	81.60	21.15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0.0	11.1	0.0	29.6	14.8	3.7	3.7	37.0	100.0	69.63	25.94
경제계열	(29)	3.4	20.7	13.8	27.6	3.4	10.3	3.4	17.2	100.0	55.52	25.01
전담공무원	(25)	0.0	0.0	0.0	20.0	8.0	12.0	8.0	52.0	100.0	81.60	21.15
연령대												
40대	(21)	0.0	4.8	0.0	28.6	14.3	9.5	14.3	28.6	100.0	70.95	22.34
50대	(49)	2.0	10.2	6.1	26.5	4.1	10.2	2.0	38.8	100.0	69.18	27.30
60대 이상	(11)	0.0	27.3	9.1	18.2	18.2	0.0	0.0	27.3	100.0	59.09	28.44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0.0	2.9	2.9	26.5	8.8	2.9	8.8	47.1	100.0	76.76	24.34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9	17.1	2.9	28.6	11.4	11.4	2.9	22.9	100.0	61.14	25.41
보수적인 편	(12)	0.0	16.7	16.7	16.7	0.0	16.7	0.0	33.3	100.0	65.00	28.76

〈부표 31〉 [나. 향후대책] 현금과 소비쿠폰 중 효과적인 것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명)	① 소비쿠폰이 훨씬 효과적	② 소비쿠폰이 대체로 더 효과적	①+② 소비쿠폰이 효과적	③ 현금이 대체로 더 효과적	④ 현금이 훨씬 효과적	③+④ 현금이 효과적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22.2	22.2	44.4	28.4	27.2	55.6	100.0	2.60	1.11
계열										
전문가	(56)	17.9	17.9	35.7	37.5	26.8	64.3	100.0	2.73	1.05
전담공무원	(25)	32.0	32.0	64.0	8.0	28.0	36.0	100.0	2.32	1.22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4.8	14.8	29.6	51.9	18.5	70.4	100.0	2.74	0.94
경제계열	(29)	20.7	20.7	41.4	24.1	34.5	58.6	100.0	2.72	1.16
전담공무원	(25)	32.0	32.0	64.0	8.0	28.0	36.0	100.0	2.32	1.22
연령대										
40대	(21)	23.8	28.6	52.4	23.8	23.8	47.6	100.0	2.48	1.12
50대	(49)	22.4	20.4	42.9	24.5	32.7	57.1	100.0	2.67	1.16
60대 이상	(11)	18.2	18.2	36.4	54.5	9.1	63.6	100.0	2.55	0.93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3.5	29.4	52.9	35.3	11.8	47.1	100.0	2.35	0.98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2.9	22.9	45.7	28.6	25.7	54.3	100.0	2.57	1.12
보수적인 편	(12)	16.7	0.0	16.7	8.3	75.0	83.3	100.0	3.42	1.16

〈부표 32〉 [나. 향후대책] 중앙정부는 현금, 지방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①+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③+④ 찬성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7.4	33.3	40.7	46.9	12.3	59.3	100.0	2.64	0.80
계열										
전문가	(56)	7.1	41.1	48.2	41.1	10.7	51.8	100.0	2.55	0.78
전담공무원	(25)	8.0	16.0	24.0	60.0	16.0	76.0	100.0	2.84	0.8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7.4	33.3	40.7	48.1	11.1	59.3	100.0	2.63	0.79
경제계열	(29)	6.9	48.3	55.2	34.5	10.3	44.8	100.0	2.48	0.78
전담공무원	(25)	8.0	16.0	24.0	60.0	16.0	76.0	100.0	2.84	0.80
연령대										
40대	(21)	9.5	28.6	38.1	52.4	9.5	61.9	100.0	2.62	0.80
50대	(49)	8.2	28.6	36.7	51.0	12.2	63.3	100.0	2.67	0.80
60대 이상	(11)	0.0	63.6	63.6	18.2	18.2	36.4	100.0	2.55	0.82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1.8	17.6	29.4	58.8	11.8	70.6	100.0	2.71	0.84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9	37.1	40.0	42.9	17.1	60.0	100.0	2.74	0.78
보수적인 편	(12)	8.3	66.7	75.0	25.0	0.0	25.0	100.0	2.17	0.58

〈부표 33〉 [나. 향후대책]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의 지역제한 필요 정도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③+④ 필요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18.5	37.0	55.6	33.3	11.1	44.4	100.0	2.37	0.91
계열										
전문가	(56)	17.9	39.3	57.1	32.1	10.7	42.9	100.0	2.36	0.90
전담공무원	(25)	20.0	32.0	52.0	36.0	12.0	48.0	100.0	2.40	0.96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1.1	33.3	44.4	40.7	14.8	55.6	100.0	2.59	0.89
경제계열	(29)	24.1	44.8	69.0	24.1	6.9	31.0	100.0	2.14	0.88
전담공무원	(25)	20.0	32.0	52.0	36.0	12.0	48.0	100.0	2.40	0.96
연령대										
40대	(21)	19.0	28.6	47.6	33.3	19.0	52.4	100.0	2.52	1.03
50대	(49)	20.4	38.8	59.2	32.7	8.2	40.8	100.0	2.29	0.89
60대 이상	(11)	9.1	45.5	54.5	36.4	9.1	45.5	100.0	2.45	0.82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1.8	29.4	41.2	47.1	11.8	58.8	100.0	2.59	0.86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14.3	45.7	60.0	28.6	11.4	40.0	100.0	2.37	0.88
보수적인 편	(12)	50.0	33.3	83.3	8.3	8.3	16.7	100.0	1.75	0.97

〈부표 34〉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1.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①+② 필요하지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17.3	43.2	60.5	28.4	11.1	39.5	100.0	2.33	0.89
계열										
전문가	(56)	16.1	50.0	66.1	25.0	8.9	33.9	100.0	2.27	0.84
전담공무원	(25)	20.0	28.0	48.0	36.0	16.0	52.0	100.0	2.48	1.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1.1	44.4	55.6	33.3	11.1	44.4	100.0	2.44	0.85
경제계열	(29)	20.7	55.2	75.9	17.2	6.9	24.1	100.0	2.10	0.82
전담공무원	(25)	20.0	28.0	48.0	36.0	16.0	52.0	100.0	2.48	1.00
연령대										
40대	(21)	14.3	52.4	66.7	23.8	9.5	33.3	100.0	2.29	0.85
50대	(49)	22.4	36.7	59.2	28.6	12.2	40.8	100.0	2.31	0.96
60대 이상	(11)	0.0	54.5	54.5	36.4	9.1	45.5	100.0	2.55	0.69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4.7	44.1	58.8	26.5	14.7	41.2	100.0	2.41	0.92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8.6	51.4	60.0	34.3	5.7	40.0	100.0	2.37	0.73
보수적인 편	(12)	50.0	16.7	66.7	16.7	16.7	33.3	100.0	2.00	1.21

〈부표 35〉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2. 백화점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①+② 필요하지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16.0	34.6	50.6	28.4	21.0	49.4	100.0	2.54	1.00
계열										
전문가	(56)	16.1	35.7	51.8	30.4	17.9	48.2	100.0	2.50	0.97
전담공무원	(25)	16.0	32.0	48.0	24.0	28.0	52.0	100.0	2.64	1.08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1.1	40.7	51.9	37.0	11.1	48.1	100.0	2.48	0.85
경제계열	(29)	20.7	31.0	51.7	24.1	24.1	48.3	100.0	2.52	1.09
전담공무원	(25)	16.0	32.0	48.0	24.0	28.0	52.0	100.0	2.64	1.08
연령대										
40대	(21)	19.0	42.9	61.9	19.0	19.0	38.1	100.0	2.38	1.02
50대	(49)	18.4	30.6	49.0	28.6	22.4	51.0	100.0	2.55	1.04
60대 이상	(11)	0.0	36.4	36.4	45.5	18.2	63.6	100.0	2.82	0.75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4.7	35.3	50.0	26.5	23.5	50.0	100.0	2.59	1.02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8.6	34.3	42.9	34.3	22.9	57.1	100.0	2.71	0.93
보수적인 편	(12)	41.7	33.3	75.0	16.7	8.3	25.0	100.0	1.92	1.00

〈부표 36〉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3. 온라인 전자상거래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①+② 필요하지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19.8	37.0	56.8	34.6	8.6	43.2	100.0	2.32	0.89
계열										
전문가	(56)	19.6	42.9	62.5	30.4	7.1	37.5	100.0	2.25	0.86
전담공무원	(25)	20.0	24.0	44.0	44.0	12.0	56.0	100.0	2.48	0.96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4.8	44.4	59.3	29.6	11.1	40.7	100.0	2.37	0.88
경제계열	(29)	24.1	41.4	65.5	31.0	3.4	34.5	100.0	2.14	0.83
전담공무원	(25)	20.0	24.0	44.0	44.0	12.0	56.0	100.0	2.48	0.96
연령대										
40대	(21)	14.3	38.1	52.4	42.9	4.8	47.6	100.0	2.38	0.80
50대	(49)	24.5	38.8	63.3	26.5	10.2	36.7	100.0	2.22	0.94
60대 이상	(11)	9.1	27.3	36.4	54.5	9.1	63.6	100.0	2.64	0.81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4.7	41.2	55.9	35.3	8.8	44.1	100.0	2.38	0.85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11.4	42.9	54.3	40.0	5.7	45.7	100.0	2.40	0.77
보수적인 편	(12)	58.3	8.3	66.7	16.7	16.7	33.3	100.0	1.92	1.24

〈부표 37〉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4. 대형전자 판매점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명)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①+② 필요치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17.3	34.6	51.9	37.0	11.1	48.1	100.0	2.42	0.91
계열										
전문가	(56)	16.1	39.3	55.4	35.7	8.9	44.6	100.0	2.38	0.86
전담공무원	(25)	20.0	24.0	44.0	40.0	16.0	56.0	100.0	2.52	1.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1.1	48.1	59.3	29.6	11.1	40.7	100.0	2.41	0.84
경제계열	(29)	20.7	31.0	51.7	41.4	6.9	48.3	100.0	2.34	0.90
전담공무원	(25)	20.0	24.0	44.0	40.0	16.0	56.0	100.0	2.52	1.00
연령대										
40대	(21)	14.3	42.9	57.1	38.1	4.8	42.9	100.0	2.33	0.80
50대	(49)	22.4	30.6	53.1	32.7	14.3	46.9	100.0	2.39	1.00
60대 이상	(11)	0.0	36.4	36.4	54.5	9.1	63.6	100.0	2.73	0.65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4.7	44.1	58.8	29.4	11.8	41.2	100.0	2.38	0.89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34.3	40.0	48.6	11.4	60.0	100.0	2.66	0.76
보수적인 편	(12)	58.3	8.3	66.7	25.0	8.3	33.3	100.0	1.83	1.11

〈부표 38〉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5. 유흥주점,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 레저, 사행업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명)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①+② 필요치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19.8	18.5	38.3	27.2	34.6	61.7	100.0	2.77	1.13
계열										
전문가	(56)	17.9	16.1	33.9	30.4	35.7	66.1	100.0	2.84	1.11
전담공무원	(25)	24.0	24.0	48.0	20.0	32.0	52.0	100.0	2.60	1.19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8.5	18.5	37.0	25.9	37.0	63.0	100.0	2.81	1.14
경제계열	(29)	17.2	13.8	31.0	34.5	34.5	69.0	100.0	2.86	1.09
전담공무원	(25)	24.0	24.0	48.0	20.0	32.0	52.0	100.0	2.60	1.19
연령대										
40대	(21)	19.0	28.6	47.6	14.3	38.1	52.4	100.0	2.71	1.19
50대	(49)	24.5	12.2	36.7	32.7	30.6	63.3	100.0	2.69	1.16
60대 이상	(11)	0.0	27.3	27.3	27.3	45.5	72.7	100.0	3.18	0.87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7.6	23.5	41.2	29.4	29.4	58.8	100.0	2.71	1.09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11.4	14.3	25.7	31.4	42.9	74.3	100.0	3.06	1.03
보수적인 편	(12)	50.0	16.7	66.7	8.3	25.0	33.3	100.0	2.08	1.31

〈부표 39〉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6.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 조세, 공공요금 업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명)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①+② 필요치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1)	24.7	37.0	61.7	27.2	11.1	38.3	100.0	2.25	0.96
계열										
전문가	(56)	26.8	41.1	67.9	23.2	8.9	32.1	100.0	2.14	0.92
전담공무원	(25)	20.0	28.0	48.0	36.0	16.0	52.0	100.0	2.48	1.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22.2	40.7	63.0	25.9	11.1	37.0	100.0	2.26	0.94
경제계열	(29)	31.0	41.4	72.4	20.7	6.9	27.6	100.0	2.03	0.91
전담공무원	(25)	20.0	28.0	48.0	36.0	16.0	52.0	100.0	2.48	1.00
연령대										
40대	(21)	23.8	42.9	66.7	23.8	9.5	33.3	100.0	2.19	0.93
50대	(49)	26.5	30.6	57.1	28.6	14.3	42.9	100.0	2.31	1.02
60대 이상	(11)	18.2	54.5	72.7	27.3	0.0	27.3	100.0	2.09	0.7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3.5	38.2	61.8	29.4	8.8	38.2	100.0	2.24	0.92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0.0	45.7	65.7	22.9	11.4	34.3	100.0	2.26	0.92
보수적인 편	(12)	41.7	8.3	50.0	33.3	16.7	50.0	100.0	2.25	1.22

〈부표 40〉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7. 면세점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①+② 필요치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17.3	23.5	40.7	28.4	30.9	59.3	100.0	2.73	1.08
계열										
전문가	(56)	16.1	16.1	32.1	37.5	30.4	67.9	100.0	2.82	1.05
전담공무원	(25)	20.0	40.0	60.0	8.0	32.0	40.0	100.0	2.52	1.16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8.5	14.8	33.3	37.0	29.6	66.7	100.0	2.78	1.09
경제계열	(29)	13.8	17.2	31.0	37.9	31.0	69.0	100.0	2.86	1.03
전담공무원	(25)	20.0	40.0	60.0	8.0	32.0	40.0	100.0	2.52	1.16
연령대										
40대	(21)	19.0	23.8	42.9	9.5	47.6	57.1	100.0	2.86	1.24
50대	(49)	20.4	22.4	42.9	32.7	24.5	57.1	100.0	2.61	1.08
60대 이상	(11)	0.0	27.3	27.3	45.5	27.3	72.7	100.0	3.00	0.77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3.5	20.6	44.1	23.5	32.4	55.9	100.0	2.65	1.18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5.7	25.7	31.4	37.1	31.4	68.6	100.0	2.94	0.91
보수적인 편	(12)	33.3	25.0	58.3	16.7	25.0	41.7	100.0	2.33	1.23

〈부표 41〉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8.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①+② 필요치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19.8	38.3	58.0	29.6	12.3	42.0	100.0	2.35	0.94
계열										
전문가	(56)	19.6	44.6	64.3	26.8	8.9	35.7	100.0	2.25	0.88
전담공무원	(25)	20.0	24.0	44.0	36.0	20.0	56.0	100.0	2.56	1.04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18.5	33.3	51.9	37.0	11.1	48.1	100.0	2.41	0.93
경제계열	(29)	20.7	55.2	75.9	17.2	6.9	24.1	100.0	2.10	0.82
전담공무원	(25)	20.0	24.0	44.0	36.0	20.0	56.0	100.0	2.56	1.04
연령대										
40대	(21)	19.0	47.6	66.7	19.0	14.3	33.3	100.0	2.29	0.96
50대	(49)	22.4	32.7	55.1	32.7	12.2	44.9	100.0	2.35	0.97
60대 이상	(11)	9.1	45.5	54.5	36.4	9.1	45.5	100.0	2.45	0.82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7.6	44.1	61.8	32.4	5.9	38.2	100.0	2.26	0.83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11.4	42.9	54.3	28.6	17.1	45.7	100.0	2.51	0.92
보수적인 편	(12)	50.0	8.3	58.3	25.0	16.7	41.7	100.0	2.08	1.24

〈부표 42〉 [나. 향후대책]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 필요 여부_ 9.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필요치 않음	② 필요치 않음	①+② 필요치 않음	③ 필요	④ 매우 필요	③+④ 필요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29.6	42.0	71.6	18.5	9.9	28.4	100.0	2.09	0.94
계열										
전문가	(56)	30.4	48.2	78.6	14.3	7.1	21.4	100.0	1.98	0.86
전담공무원	(25)	28.0	28.0	56.0	28.0	16.0	44.0	100.0	2.32	1.07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22.2	48.1	70.4	14.8	14.8	29.6	100.0	2.22	0.97
경제계열	(29)	37.9	48.3	86.2	13.8	0.0	13.8	100.0	1.76	0.69
전담공무원	(25)	28.0	28.0	56.0	28.0	16.0	44.0	100.0	2.32	1.07
연령대										
40대	(21)	14.3	57.1	71.4	19.0	9.5	28.6	100.0	2.24	0.83
50대	(49)	36.7	34.7	71.4	20.4	8.2	28.6	100.0	2.00	0.96
60대 이상	(11)	27.3	45.5	72.7	9.1	18.2	27.3	100.0	2.18	1.08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20.6	50.0	70.6	26.5	2.9	29.4	100.0	2.12	0.77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25.7	45.7	71.4	14.3	14.3	28.6	100.0	2.17	0.98
보수적인 편	(12)	66.7	8.3	75.0	8.3	16.7	25.0	100.0	1.75	1.22

〈부표 43〉 [나. 향후대책]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간 중복제한 없이 모두 수령 가능해야한다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전혀 동의안함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1)	8.6	33.3	42.0	45.7	12.3	58.0	100.0	2.62	0.81
계열										
전문가	(56)	8.9	32.1	41.1	48.2	10.7	58.9	100.0	2.61	0.80
전담공무원	(25)	8.0	36.0	44.0	40.0	16.0	56.0	100.0	2.64	0.86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7	29.6	33.3	55.6	11.1	66.7	100.0	2.74	0.71
경제계열	(29)	13.8	34.5	48.3	41.4	10.3	51.7	100.0	2.48	0.87
전담공무원	(25)	8.0	36.0	44.0	40.0	16.0	56.0	100.0	2.64	0.86
연령대										
40대	(21)	9.5	28.6	38.1	47.6	14.3	61.9	100.0	2.67	0.86
50대	(49)	8.2	34.7	42.9	42.9	14.3	57.1	100.0	2.63	0.83
60대 이상	(11)	9.1	36.4	45.5	54.5	0.0	54.5	100.0	2.45	0.69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5.9	29.4	35.3	47.1	17.6	64.7	100.0	2.76	0.82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11.4	31.4	42.9	48.6	8.6	57.1	100.0	2.54	0.82
보수적인 편	(12)	8.3	50.0	58.3	33.3	8.3	41.7	100.0	2.42	0.79

〈부표 44〉 [전담공무원]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량 변화

(단위 : %)

Base=전담공무원	사례수 (명)	② 조금 감소	①+② 감소	④ 조금 증가	⑤ 크게 증가	④+⑤ 증가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25)	8.0	8.0	40.0	52.0	92.0	100.0	4.36	0.86
계열									
전담공무원	(25)	8.0	8.0	40.0	52.0	92.0	100.0	4.36	0.86
전공									
전담공무원	(25)	8.0	8.0	40.0	52.0	92.0	100.0	4.36	0.86
연령대									
40대	(8)	0.0	0.0	75.0	25.0	100.0	100.0	4.25	0.46
50대	(16)	6.3	6.3	25.0	68.8	93.8	100.0	4.56	0.81
60대 이상	(1)	100.0	100.0	0.0	0.0	0.0	100.0	2.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0)	0.0	0.0	50.0	50.0	100.0	100.0	4.50	0.53
진보도 보수도 아님	(12)	8.3	8.3	33.3	58.3	91.7	100.0	4.42	0.90
보수적인 편	(3)	33.3	33.3	33.3	33.3	66.7	100.0	3.67	1.53

〈부표 45〉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1순위

(단위 : %)

Base=전담공무원	사례수 (명)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상담 등 민원인 응대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계
▣ 전체 ▣	(25)	64.0	20.0	16.0	100.0
계열					
전담공무원	(25)	64.0	20.0	16.0	100.0
전공					
전담공무원	(25)	64.0	20.0	16.0	100.0
연령대					
40대	(8)	87.5	12.5	0.0	100.0
50대	(16)	56.3	25.0	18.8	100.0
60대 이상	(1)	0.0	0.0	10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0)	70.0	20.0	1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12)	58.3	16.7	25.0	100.0
보수적인 편	(3)	66.7	33.3	0.0	100.0

〈부표 46〉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2순위

(단위 : %)

Base=전담공무원	사례수 (명)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상담 등 민원인 응대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홍보 및 대상자 발굴	계
▣ 전체 ▣	(25)	60.0	16.0	16.0	8.0	100.0
계열						
전담공무원	(25)	60.0	16.0	16.0	8.0	100.0
전공						
전담공무원	(25)	60.0	16.0	16.0	8.0	100.0
연령대						
40대	(8)	62.5	12.5	12.5	12.5	100.0
50대	(16)	62.5	12.5	18.8	6.3	100.0
60대 이상	(1)	0.0	100.0	0.0	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0)	60.0	20.0	20.0	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12)	50.0	16.7	16.7	16.7	100.0
보수적인 편	(3)	100.0	0.0	0.0	0.0	100.0

〈부표 47〉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3순위

(단위 : %)

Base=전담공무원	사례수 (명)	상담 등 민원인 응대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계
▣ 전체 ▣	(25)	32.0	32.0	20.0	16.0	100.0
계열						
전담공무원	(25)	32.0	32.0	20.0	16.0	100.0
전공						
전담공무원	(25)	32.0	32.0	20.0	16.0	100.0
연령대						
40대	(8)	50.0	25.0	25.0	0.0	100.0
50대	(16)	25.0	37.5	18.8	18.8	100.0
60대 이상	(1)	0.0	0.0	0.0	10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0)	40.0	20.0	30.0	1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12)	25.0	41.7	16.7	16.7	100.0
보수적인 편	(3)	33.3	33.3	0.0	33.3	100.0

〈부표 48〉 [전담공무원] 코로나 19 대책 일선 전달 시 가장 어려운 점_4순위

(단위 : %)

Base=전담공무원	사례수 (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상담 등 민원인 응대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계
▣ 전체 ▣	(25)	60.0	32.0	4.0	4.0	100.0
계열						
전담공무원	(25)	60.0	32.0	4.0	4.0	100.0
전공						
전담공무원	(25)	60.0	32.0	4.0	4.0	100.0
연령대						
40대	(8)	62.5	25.0	0.0	12.5	100.0
50대	(16)	56.3	37.5	6.3	0.0	100.0
60대 이상	(1)	10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0)	80.0	20.0	0.0	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12)	41.7	41.7	8.3	8.3	100.0
보수적인 편	(3)	66.7	33.3	0.0	0.0	100.0

〈부표 49〉 [전담공무원] 선별지원의 경우 행정비용 증가 우려에 대한 의견

(단위 : %)

Base=전담공무원	사례수 (명)	② 별로 동의안함	①+② 동의안함	③ 대체로 동의	④ 매우 동의	③+④ 동의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5)	4.0	4.0	40.0	56.0	96.0	100.0	3.52	0.59
계열									
전담공무원	(25)	4.0	4.0	40.0	56.0	96.0	100.0	3.52	0.59
전공									
전담공무원	(25)	4.0	4.0	40.0	56.0	96.0	100.0	3.52	0.59
연령대									
40대	(8)	0.0	0.0	62.5	37.5	100.0	100.0	3.38	0.52
50대	(16)	6.3	6.3	31.3	62.5	93.8	100.0	3.56	0.63
60대 이상	(1)	0.0	0.0	0.0	100.0	100.0	100.0	4.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10)	0.0	0.0	50.0	50.0	100.0	100.0	3.50	0.53
진보도 보수도 아님	(12)	0.0	0.0	41.7	58.3	100.0	100.0	3.58	0.51
보수적인 편	(3)	33.3	33.3	0.0	66.7	66.7	100.0	3.33	1.15

〈부표 50〉 연령대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 전체 ▣	(81)	25.9	60.5	13.6	100.0
계열					
전문가	(56)	23.2	58.9	17.9	100.0
전담공무원	(25)	32.0	64.0	4.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33.3	48.1	18.5	100.0
경제계열	(29)	13.8	69.0	17.2	100.0
전담공무원	(25)	32.0	64.0	4.0	100.0
연령대					
40대	(21)	100.0	0.0	0.0	100.0
50대	(49)	0.0	100.0	0.0	100.0
60대 이상	(11)	0.0	0.0	100.0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38.2	55.9	5.9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17.1	62.9	20.0	100.0
보수적인 편	(12)	16.7	66.7	16.7	100.0

〈부표 51〉 이념성향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진보적인 편이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보수적인 편이다	계
▣ 전체 ▣	(81)	42.0	43.2	14.8	100.0
계열					
전문가	(56)	42.9	41.1	16.1	100.0
전담공무원	(25)	40.0	48.0	12.0	100.0
전공					
사회복지계열	(27)	55.6	33.3	11.1	100.0
경제계열	(29)	31.0	48.3	20.7	100.0
전담공무원	(25)	40.0	48.0	12.0	100.0
연령대					
40대	(21)	61.9	28.6	9.5	100.0
50대	(49)	38.8	44.9	16.3	100.0
60대 이상	(11)	18.2	63.6	18.2	100.0
이념성향					
진보적인 편	(34)	100.0	0.0	0.0	100.0
진보도 보수도 아님	(35)	0.0	100.0	0.0	100.0
보수적인 편	(12)	0.0	0.0	100.0	100.0

3.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전담공무원-전문가 의견 조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영향과 긴급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정책대응 방식에 관한 전문가 및 사회복지전문가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동의서에 작성해주신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는 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위해 활용될 뿐이며, 결과 분석이나 해석 시 귀하의 모든 개인적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현황 등의 개인정보는 조사가 종료된 직후 폐기됩니다.

조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로 3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문조사 책임자: 김문길 연구위원 (044-287-8354)
◇ 조사기간: 2020년 12월 24일부터 약 2주일 간
◇ 설문조사기관: 한국리서치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문1. 대상 //리스트 기준 자동입력//
1. 전문가 2. 공무원

선문2. 전공 계열 //리스트 기준 자동입력//
1. 사회복지계열 2. 경제계열 3. 공무원

1. 공통

가. 대책 평가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정부는 5월 4일부터 전국민에게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수단은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도록 하였고,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단,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가구는 건강보험료 상 가구기준을 따랐습니다.

문1.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었다(총평)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1-1. '상기 '긴급재난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1]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2. 지원액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2-1. (문2=1,2응답자만) 그렇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1인 가구 (만원), 2인 가구 (만원), 3인 가구 (만원), 4인 가구 (만원), 5인 가구 (만원)

※ 다음은 아래 <2차 재난지원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각 정책 내용을 살펴보시고 <2차 재난지원 대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차 재난지원 대책 종합>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 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
- 지원금액은 1차 긴급재난 지원금과 동일하게 4인 가구까지 가구 규모별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새희망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
- 일반업종(100만원),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집합제한업종(150만원) 3가지로 구분하여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 (현금지원 방안)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70만명
- 지원금액: 50만원 ~ 150만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별도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을 지원 (현금지원)
- 신규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비교대상 기간 대비 20년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4.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는 경우)
- 지원금액: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 (현금지원)

5. 아동돌봄쿠폰
- 지원대상: 초등학생 이하 (13년 12월 이전 출생)
- 지원금액: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교 또는 휴원을 하면서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계좌와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각 지역에 따라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 상품권으로 지급됨)

문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총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
- 지원금액은 1차 긴급재난 지원금과 동일하게 4인 가구까지 가구 규모별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3]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금액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4-1. (문4=1,2응답자만) 그렇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1인 가구 (만원), 2인 가구 (만원), 3인 가구 (만원), 4인 가구 (만원), 5인 가구 (만원)

문5.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새희망자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총평)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새희망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
- 일반업종(100만원),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집합제한업종(150만원) 3가지로 구분하여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 (현금지원 방안)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5-1.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새희망자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5]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총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70만명
- 지원금액: 50만원 ~ 150만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별도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을 지원 (현금지원)
- 신규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비교대상 기간 대비 20년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6]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7.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총평)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 (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는 경우)
- 지원금액: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 (현금지원)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7-1.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7]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8. 아동돌봄쿠폰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총평)

[아동돌봄쿠폰]
- 지원대상: 초등학생 이하 (13년 12월 이전 출생)
- 지원금액: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교 또는 휴원을 하면서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계좌와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각 지역에 따라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 상품권으로 지급됨)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8-1. '아동돌봄쿠폰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8]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9. 2차 재난지원 대책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총평)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문9-1. '상기 '2차 재난지원 대책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에 대해 [제시 : 문9]로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10. 상기 제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부터 '아동돌봄쿠폰'까지의 대책 중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할 대책을 순서대로 1~5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4.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구직지원금)
5. 아동돌품쿠폰

나. 향후 대책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하의 질문은 향후 마련될 대책의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1,2차 긴급재난 지원과 같이 1회성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1.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 생계지원	<----------								경기부양
1	2	3	4	5	6	7	8	9	10

문12.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자 범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1. 피해 여부와 소득(및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및 재산)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소득(및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4. 피해를 입고 소득(및 재산)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5. 기타 _____

문13. (문12=2~5) 귀하가 정책결정자라고 가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예시: 전년 대비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개인 혹은 가구에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등)

문14. (문12=1)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의 단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 개인으로 한다는 것은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1인당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가구로 한다는 1,2차 긴급재난 지원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한다는 것을 각각 의미)

매우 동의	동의	비동의	매우 비동의
4	3	2	1

문14-1. '지급대상의 단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제시 : 문14]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15. (문12=2~5) 소득과 재산으로 선별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4	3	2	1

문15-1. '소득과 재산으로 선별할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제시 : 문15]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16. (문12=2~5)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4	3	2	1

문16-1.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제시 : 문16]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급적 상세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17. 지급대상은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눌 때 어느 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소득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의 약150% 수준)

빈곤가구			중간소득						모든 가구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2	3	4	5	6	7	8	9	10

문17-1. [제시 : 문17]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8. 가계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현금과 소비쿠폰(지역화폐, 상품권 포함)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방식이 상이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현금과 소비쿠폰 등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금이 월씬 효과적	현금이 대체로 더 효과적	소비쿠폰이 대체로 더 효과적	소비쿠폰이 월씬 효과적
4	3	2	1

문18-1. [제시 : 문18]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9. 중앙정부는 현금지원, 지방정부는 소비쿠폰(지역화폐, 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4	3	2	1

문20.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의 지역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3	2	1

문21.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업종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종	매우 필요	필요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4	3	2	1
1.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2. 백화점				
3. 온라인 전자상거래				
4. 대형전자 판매점				
5. 유흥주점,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 레저, 사행업종				
6.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 조세, 공공요금 업종				
7. 면세점				
8.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9.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문22.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을 중복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2. 전문가용 (선문1=1)

긴급재난 지원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총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2조원(세출구조조정 4.8조원, 국채발행 3.4조원, 외평기금 축소 2.8조원, 기금 활용 1.2조원), 지방비 2.1조원
-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총 7조8천억원으로 전액 국비(국채발행 7.5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0.3조원)
- 3차 긴급재난 지원금(예정): 총 3조원+α.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 예정

문23. 국회와 정부가 검토 중인 3차 긴급재난 지원의 예산은 총 3조원+α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	대체로 충분	적정	대체로 부족	매우 부족
5	4	3	2	1

24. 긴급재난 지원의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증세
2. 세출구조조정
3. 국채발행
4. 기타(.....)

24-1. (문24=1 응답자만) 증세는 어떤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모든 근로소득자 소득세 증세
2. 고소득층 정규직 소득세 증세
3. 부동산 관련 세제(종부세, 양도세 등) 확대
4. 상속세, 증여세 증세
5. 코로나로 이득을 본 기업(택배, 홈쇼핑 등) 증세
6. 법인세 등 기업관련 세제 증세
7.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증세
8. 기타(.....)

3. 전담공무원용 (선문1=2)

문25.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업무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크게 증가	조금 증가	변화 없음	조금 감소	매우 감소
5	4	3	2	1

문25-1. (문25=5,4) 증가했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6.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일선에서 전달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보기를 1~4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 상담 등 민원인 응대
2. 홍보 및 대상자 발굴
3.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4.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문27. 전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 할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4	3	2	1

◎ 응답자 특성 ◎

배문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배문2. 귀하의 이념성향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편이십니까?

1. 진보적인 편이다
2.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3. 보수적인 편이다
9. 잘 모르겠다

▣ 귀한 의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로 3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 -)